

工學碩士 學位論文

IV, 72

15-목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에 관한연구
- 대경권을 중심으로 -

慶州大學校 大學院

都 市 工 學 科

이 정 안

2008年 12月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에 관한연구
- 대경권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庚 大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都 市 工 學 科

이 정 안

李貞安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8年 12月

感謝의 글

論文을 쓰면서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분들
게 이 지면을 빌려 感謝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끊임없는 叱責과 도움으로 大學校 , 大學院 碩士 과정을 무사히 마
치도록 激勵와 稱讚을 아끼지 않으셨던 너무나도 멋지고 존경스러운 지도
교수 김경대 교수님께 진심의 感謝의 말씀드립니다. 평소 대쪽같고 거침
없이 저를 친자식 같이 살피주시고 정말 많은 가르침과 敎訓을 몸소 실천
해주셨던 것을 본받아 앞으로 제인생의 나아갈 길에 크나큰 길잡이가 되
어주신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학부때부터 지금까지 학
업에 대한 열정과 항상 밥 한끼라도 챙겨주시려 하셨던 또 한분의 멋진
정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칭찬을 마다하지 않고 늘
念慮 와 激勵 를 해주셔서 저에게 自信感 을 불어 넣어주신 박창수 교수
님께 너무나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해년 치솟는 등록비와 학업비, 생활비에 불평한번 안하시고 자식 돈
걱정 때문에 학업에 방해될까 굶진 않을까 늘 염려와 따뜻한 말씀을 주신
물심양면의 크나큰 지주이신 우리 아버지 이태연, 우리 김화순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우리 형님께 평생 感謝 와 앞으로의 恩惠 에 대한 보답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창시절에 많은친구들 특히 논문쓰면서 많이 의지하고 재
밋게 해줬던 마창영이 하고 강성혁기 박경워니 김지미니 고맙다. 그리고
이것저것부려먹고 많이 못챙겨준 가애도 고맙다. 맛난거묵자 . 대학원 동
기들 및 이 페이지가 짧아 일일이 다 못쓰지만 김민을 비롯한 나의 친구
후배님들 眞心 으로 感謝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곁에서 늘 힘
이되어준 평생 벗 보라와 보라부모님께 진심어린 마음과 사랑을 담아 감
사의 글을 마치고자합니다.

李 貞 安

< 목 차 >

제 I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 II 장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이론 및 사례

제 1 절 <u>광역경제권</u> 의 개념	5
1. 광역경제권 기본개념	5
2. 광역경제권 관련용어	6
제 2 절 광역경제권의 <u>신성장동력산업</u> 의 잠재력과 산업전략	7
1.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8
2.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8
3.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9
4.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9
5. 대경권 (대구, 경북)	10
6. 강원권 및 제주권	10
제 3 절 경제권의 권역설정과 산업전략의 해외사례	11
1. 프랑크푸르트 광역경제권(Frankfurt/Rhein-Main Region)	11
2. 리옹 광역경제권 (Grand Lyon)	13
3. <u>영국</u> 의 RDA 중심의 광역경제권	15
4. <u>일본</u> 의 광역(경제)계획권	16
5. 해외 신성장동력 육성 사례	17

제 III 장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현황 및 정책

제 1 절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현황	18
1.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의 산업전략과 전망	20
제 2 절 중앙정부의 광역경제권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정책	33
1. 성장거점 육성	34
2. 광역기반시설 확충	35
3. 주요정책과제	36
제 3 절 광역경제권중 대경권 산업전략의 현황 및 문제점	39

제 IV 장 광역경제권의 정책 개선방향 정립

제 1 절 광역경제권의 정책방향에 관한 설문조사	48
1. 광역경제권 정책의 필요성	49
2.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분야별 연계·협력 및 공동 추진의 중요도	51
3. 광역경제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원배분 방향	52
4. 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요 요인	54
5. 선행 설문조사의 정책점 시사점	56
제 2 절 신성장동력 산업 입지에 대한 주민 의식조사	57
제 3 절 대경권의 개발방향 정립	65
1. 산업전략 개발방향	65
2. 권역별 산업구조 특화전략	66

제 V 장 결 론	69
-----------------	----

< 참고문헌 >

< ABSTRACT >

< 표 차 례 >

< 표 2-1 > 주요국의 신성장동력 육성사례	17
< 표 3-1 >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19
< 표 3-2 >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한 발전전략	19
< 표 3-3 > 경북전략산업	39
< 표 3-4 > 경북지역 모바일 관련 산업체 현황	41
< 표 3-5 >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지역별 분포와 기업현황	42
< 표 3-6 > 대구·경북지역 임베디드산업 현황	43
< 표 3-7 > 광업·제조업 통계 기준 대구·경북지역 부품산업 현황 ..	44
< 표 3-8 > 경북지역의 작물현황	46
< 표 4-1 > 주요사업 분야별 광역·지역발전 특별 재원의 적정배분비중	53
< 표 4-2 > 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과제별 중요도	55
< 표 4-3 > 설문지 세부항목	57
< 표 4-4 > 설문지 세부항목 따른 비율1	58
< 표 4-5 > 설문지 세부항목 따른 비율2	59
< 표 4-6 > 설문지 세부항목 따른 비율3	60
< 표 4-7 > 설문지 세부항목 따른 비율4	61
< 표 4-8 > 설문지 세부항목 따른 비율5	62
< 표 4-9 > 설문지 세부항목 따른 비율6	6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현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기존 16개 시·도를 7개(5+2)로 묶어 생활권역의 확대 및 변화, 규모의 범위를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낭비와 중복, 의사결정과 거래비용의 절감, 지역간의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효율적인 이동과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토의 3차원적 개발을 통해 전국토의 성장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 산업전략 등 지역발전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확충과 국세의 지방세화, 지방의 계획·개발권 강화 등의 지방분권적 지역개발의 움직임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투자, 규제완화, 행정중심복합도시설립과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발전적 보완에 각고의 관련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광역적 공간의 영역이 과연 경제적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이미 제1차국토종합개발에서 부터 권역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책이라는 공간정책의 실패에서 엿볼 수 있다. 1980년 목표 년도까지 지방을 수도권 수준으로 육성하는 광역권별 균형을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른 결과로 수도권의 과밀화, 지역격차 심화 등 국토개발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이후 국토종합개발에서도 특정지역 개발로 인해 더욱 불균형발전이 심화되었다.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수요의 급증을 공급이 따라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2008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권역별 30대 선도 프로젝트 예산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7개 권역 30개 사업에 총 118조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호남권 5개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는 37조2천600억 원을 투입, 7개 권역별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이에 반해 대경권(대구·경북)과 동남권(부산·경남)에는 10개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22조500억 원이 투입된다. 호남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 예산 규모가 대경권과 동남권 등 영남지역 선도 프로젝트 사업 예산에 비해 15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 배정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호남권 선도 사업 5개 가운데 3개(새만금 개발, 여수엑스포 지원, 호남고속철도 건설)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이며 예산 규모도 전체의 70%인 25조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권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신규 사업은 서남해안 연육교 건설, 광주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2개에 불과하며 예산도 1조6천1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 개발 사업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 착공하는 새만금 신항 및 군산공항 확장 사업 등을 포함하더라도 신규 사업 예산은 12조8천900억 원에 불과, 전체 선도 사업 예산의 3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영남지역의 대경권과 동남권의 선도 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일부는 과거 정부에서 예산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신규 사업이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대경권과 동남권의 선도 사업은 모두 신규로 추진하거나 과거 정부에서 추진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신규로 착공하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실제로 기투입된 예산은 1천351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즉, 22조원의 예산이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남지역에서는 과거 정부의 계속사업과 현 정부의 신규 사업을 병행 진행시키면서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다. 대경권(12조600억원)과 동남권(9조9천900억원)의 선도 사업 예산 총액은 총 22조5천억원 호남권 선도 사업 예산에 비해 무려 15조원에 가량 적다. 그러나 영남권 선도 사업이 훨씬 실속 있다는 평가다. 선도 프로젝트 대부분이 신규 성격이 강하거나 신규 사업이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추가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규모와 예산안부터 호남권의 소외를 가중시키고 영남과의 격차를 벌이는 경제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균형발전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경권은 효율성 있는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정부의 정책인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이전과의 말꾸기식의 정책이 아닌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화발전을 도모, 자율적인 지역 주도적 발전체계 수립과 지역간의 협력 발전을 도모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인지 신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을 분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구·경북지역의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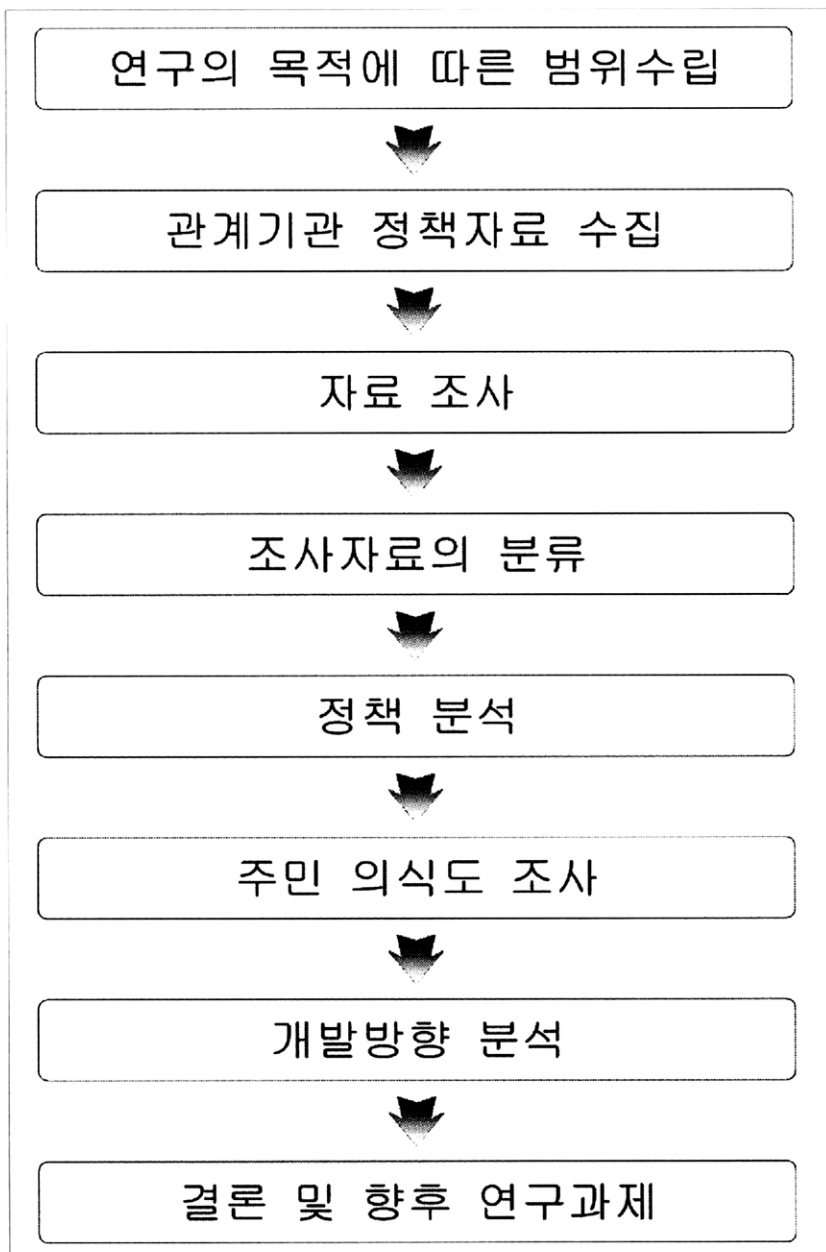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토의 행정구역중 대구·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중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5+2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와 경북산업전략기획단의 산업전략, 민간사업부문인 신성장동력산업전략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경권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및 특성화 전략을 최종 분석 후 대경권의 개발방향방안을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광역경제권의 개념과 사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산업전략의 현황 및 정책을 알아본다. 그리고 산업입지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를 통하여 대경권의 개발방향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2. 연구의 방법

본연구의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수행 과정

제 II 장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이론 및 사례

제 1 절 광역경제권의 개념

1. 광역경제권 기본개념

광역경제권은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까지를 포함하는 대도시권의 형성권(City-Regionalism)을 기반으로 하여 개별 지방정부의 기존관할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방정부간 또는 중앙지방정부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제활동지역을 의미한다.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공통분모를 살펴보면 하나이상의 (대도시정부를 포함하면서 도시의 인구규모는 최소30만, 50만 이상, 100만이상등 다양, 또는2개 이상의 지방정부관할경계구역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때로는 기초정부와 지역간 협력체제를 포함하고 농촌지역 또는 대도시권 주변이 역등배후지역(Hinterland)을 포함하는 경제활동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안영훈, 2008) 우리나라의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밝힌 광역경제권의 개념은 “시·도중심의자치단체를 뛰어넘어 산업·교육·의료·문화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인구500만명내외의권역”을 의미하며 각지역의인구규모와 인프라 산업의집적도 또한 역사문화 특수성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단위”로 이해된다.

2. 광역경제권 관련용어

광역경제권의 관련용어중 ‘경제권범위’는 산업, 철도, 교통 커뮤니케이션 등 대도시와 대도시를 포함한 주변 농어촌지역 등 대도시지역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 및 경제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이들 대도시지역권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하나의 지방정부 관할경계구역의 범위를 넘어서 상호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이 광역경제권의 영향범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권’(Metropolitan City)이 의미하는 바는 대도시권은 도시주변지역과 교외지역을 형성하는 경계구역이 인접한 지역에도 시·정부보다 규모가 작은 기초정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제·사회·문화 등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영향력이 도심지를 넘어 외곽 또는 교외지역의 다른 자치정부의 관할경계구역에까지 미치는 범위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대도시지역을 의미한다.(안영훈, 2008)

제 2 절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잠재력과 산업전략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잠재력과 산업전략에서의 도시별 경제권역으로 나누어 본다면 크게 다음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경제권별 산업전략

1.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평택항 등 SOC 인프라와 경제자유구역 등 물류, 교역 등에 우수한 대내외 관문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쏠 산업이 고르게 분포,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집중¹⁾과 우수 대학, 기업 등 집적적으로 연구개발 여건이 양호²⁾한 편이다. 따라서 금융과 기술, 인력과 정보가 세계와 교류하는 관문으로서 동북아 금융·물류·비즈니스 허브 구축, 송도 비즈니스 중심도시건설, SW, 디자인, 전시컨벤션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금융·비즈니스·물류 등 지식서비스의 산업전략을 가지고 R&D, 인력, 기술 등을 통한 우수한 지식서비스 및 제조업역량을 타 경제권에 확산하는 수도권 역량과 타 광역권과의 연계를 강화 하는 선도산업전략을 가진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2.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대전, 충북, 충남 등의 충청권 지역은 수도권에 가깝고, 청주국제공항 등 국제인프라도 구비되어, 수도권 등 타 지역 인력, 기술 및 시장접근 등 교류여건 양호하다. 또한 55개 대학, 1,321개 연구소 등 첨단기술 R&D인력과 투자역량 우수³⁾하고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IT, BT 등 첨단 산업 집적 및 성장 추세에 있다.⁴⁾ 따라서 인근광역권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통합신약개발의 플랫폼구축과 차세대 천연 바이오 소재개발의 의약·바이오산업 전략을 가진다. 또한 세계 수준의 세계 수준의 R&D 역량을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하여 팹리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차세대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전략을 가진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 1) ·정보서비스(78.6%), 문화(68.9%), 금융(67%), 비즈니스서비스(67.7%) 등
·첨단 제조업 : 반도체(74.1%), 바이오(70.2%), 정밀기기(51.3%) 등 중심
- 2) ·GDP대비 연구개발투자(전국 2.9%) : 서울(2.5%), 인천(3.1%), 경기(5.9%)
·취업자중 고급인력비중(전국 31.1%) : 서울(38.5%), 인천(27.1%), 경기(33%)
- 3)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 충청권 : 5.4%, 전국평균 2.9%
- 4) ·전자기기(17.7%), 반도체(18.9%), 정밀기기(28.5%), 바이오(23.7%), 신소재(15.2%) 등

3.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광주, 전북, 전남등의 호남권 지역은 중국을 비롯한 환황해 경제권형성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석유화학, 가전 등을 제외하고는 산업기반 미흡하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과학기술원 등 58개 대학, ETRI 광통신연구센터 및 光기업(332개) 등 光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기반을 형성하고 최대 일조량, 높은 조수차 등 태양광, 조력발전 등 자연환경 구비⁶⁾되어 있다. 따라서 친환경 녹색기술의 산업화의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허브로 신재생에너지와 광기반 융합 신산업 프로젝트, 차세대 LED 조명시스템 개발·보급하여 타 광역권의 부품·소재 산업 등과 산업간 전·후방 연계 기대하는 산업전략을 가진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4.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등의 동남권은 부산항 등 환태평양 물류거점으로,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 최대 집적⁷⁾되어있다. 하지만 자동차, 조선, 기계 등 분야에 109개 대학, 1,195개 연구소 등이 있으나, 핵심 부품소재 개발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약⁸⁾하다. 따라서 저탄소 수송시스템의 핵심공급기지를 위한 그린카 오토벨트를 구축하고 차세대 조선산업 기반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간 융합과 부품·소재산업의 동반발전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하여 미래형 해상플랜트 설계 및 장비 공급기지, 차세대 선박 부품 개발 프로젝트등 융합 부품·소재의 산업전략을 가진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5) · 전국대비 업종별 생산비중 : 석유화학(55.1%), 가전(14.6%) 등

6) · 새만금 지역에 총 22,300천㎡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계획

· 신재생에너지 업체수가 전국(954) 대비 23%(154)로 가장 많이 집적

7) ·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 : 1,326만 TEU(세계 5위)

· 조선(91.8%), 기계(41.0%), 석유화학(35.9%), 자동차(34%), 항공우주(98.5%)

· 사업체수 23.1%, 종사자수 32.4%, 생산액 38.6%, 부가가치 37.7%

8) · GDP대비 R&D투자비중 (전국 2.96%) : 부산 0.7%, 울산 0.9%, 경남 1.7%

5. 대경권 (대구 · 경북)

대구 · 경북 등의 대경권은 전자기기(구미), 철강(포항) 등 전통적 주력 사업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최대 원자력발전지역(원전 20기중 10기 소재)이며, 독도 등 해역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신 연료 해양에너지 풍부하다. 따라서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차세대 이동통신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 형성하기 위한 모바일 이노벨트 조성 및 이동통신 부품 · 소재 밸리 구축하는 산업전략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린에너지 산업벨트 구축하고 차세대 에너지 소재 개발을 하여 원자력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미래 에너지원 개발의 전초기지 역할에 중점을 두는 산업전략을 가진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6. 강원권 및 제주권

강원권 제조업 비중(10%, 전국평균 27.7%)이 낮는데 반해, 국토의 허파로서 산림휴양자원(권역의 82.4%) 풍부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주 지역 의료기기 업체 집적으로 바이오·의료 산업 성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 의료관광 거점구축하고 미래형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마련하여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산업전략을 가진다.

제주권은 강수량과 지질특성상 물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성장자원화 가능하고 국제적 휴양·관광지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아 제주 Water 클러스터 조성하는 등 물 산업, 관광레저로서 국제 수준의 웰빙산업 기지로의 산업전략을 가진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9) · 전자정보기기(37.8%), 철강(36.7%), 섬유(34.3%), 가전(21.6%), 자동차(10.9%) 등

제 3 절 경제권의 권역설정과 산업전략의 해외사례

1. 프랑크푸르트 광역경제권(Frankfurt/Rhein-Main Region)

프랑크푸르트 시는 독일 헤센(Hessen) 주의 수도이면서 유럽연합의 국제 금융재정 중심지이다. 이러한 도시 경쟁력 때문에 다른 주와 달리 주도적으로 광역경제권 협력기구의 설치를 리드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예외적으로 프랑크푸르트 광역경제권은 오랜 역사를 가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주변의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자치계층의 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1974년부터 헤센 주정부는 이 당시에는 43개의 기초정부와 160만 명의 인구를 포함한 프랑크푸르트 연합기구(Umlandverband Frankfurt, UVF)의 설치를 인정했고, 이 기구는 주민직선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략적인 자치협력정부와 같은 법적 지위를 행사하여 왔다. 이 광역경제권의 핵심인 프랑크푸르트 시정부는 당시 60만 명의 주민이었다.



<그림 2-2> 프랑크푸르트 광역경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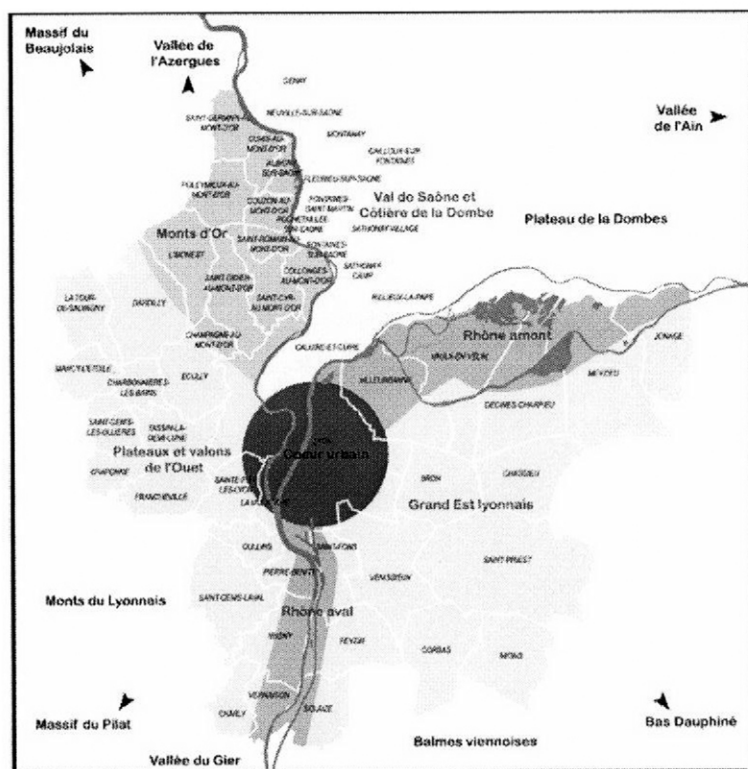
주요 사업으로는 공간계획, 교통, 쓰레기처리, 상하수도, 환경보호, 관광 레저스포츠 등의 기능을 책임지고 있었다. 후에 지역경제발전과 유통 및 기반시설 마케팅(place marketing)분야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도심지와 배후지역간 정책의 수혜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1995년 선거 때 경제발전과 교통 분야의 기능은 다른 별도의 특별목적조합으로 이양되면서 그와 같은 갈등이 공식적으로 표출되어 결과적으로 2001년 새로운 개편을 하였다.

새로운 조직으로써 프랑크푸르트 대도시 경제권(Frankfurt Rhine Mainregion, Ballungsraum und Region Frankfurt/Rhein-Main)이 만들어졌고, 현재 75개의 지방정부를 회원으로 하며 총 인구는 210만 명 정도에 이른다. 이와 함께 2001년 개혁을 통해서 프랑크푸르트 라인 마인 공간계획 연합기구(Planungsverband Frankfurt Rhine Main, PVFRM)가 설치되었다. 이기구의 법적 권한은 다소 약하지만 지역공간계획과 관련한 전략적인 계획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치적 기구으로써 관할지역의 주민들이 직접선거에 의해서 지역의회(Rat der Region, council of the region)를 구성하였다.

이 지역의회는 대도시권 정책문제에 관해 포럼형태로 운영하면서, 지역의회 동의하에 기능적으로 다시 별도의 단일사업협력기구(목적조합 유형)들을 설치·운영하면서 다변적인 사업을 다양한 하부 전문기구를 통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현재 문제라면, 단일사업 협력기구들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 계층화, 주택시장의 다원화 등 전략적인 쟁점들에 관련된 정책들은 그 효과가 약한 실정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프랑크푸르트 대도시권 지역주민들이 모두 지방공공서비스의 사용자들이지만 광역경제권의 공간적, 지리적 분포 상황이 너무 넓은 관계로 개별사업별로 ‘규모의 경제’ 원칙이 적용 가능한 특성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겠다.(안영훈, 2008)

2. 리옹 광역경제권 (Grand Lyon)

프랑스 리옹은 제2의 대도시이지만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서 파리시와 같은 주목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들과 달리 역사적으로 상당한 자치역량을 발휘하면서 자율적 역량에 기초하여 성장한 대도시 지역이기도 하다. 그 중심이 되는 협력기구(Grand Lyon, GreaterLyon)는 55개 기초자치단체와 인구 110만 명을 포함하는 광역경제권으로써 지방정부간 협력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사례를 따라서 프랑스 전국의 여러 대도시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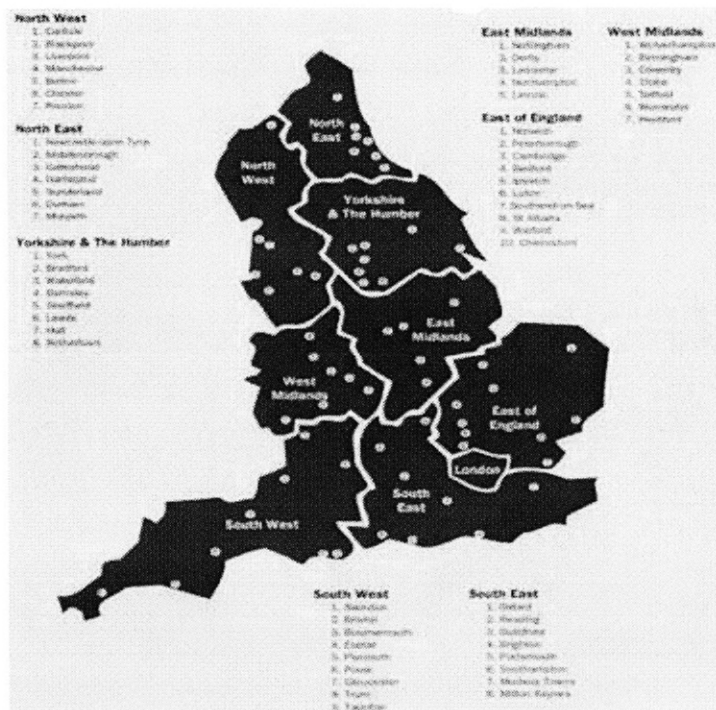
<그림 2-3> 리옹광역경제권

리용시는 이외에도 보르도, 릴, 스트라스부르크 모두, 이미 오래 전인 1966년에 통과된 법률에 근거해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공동체 협력기구(Communauté urbaine for theurbanised area, Urban Community)를 만들어서 대도시 중심의 광역경제권관리를 해 왔다.

리용시의 경우 1967년부터 대도시협력기구를 구성해서 주민 5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들을 회원으로 하여, 극세분화 된 프랑스 기초정부 계층에 대하여 경제의 규모에 의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정부간 협약방식(Co-operative Inter-Municipal Arrangements)에 의한 자율적인 대규모 경제권을 형성하였다. 기능적으로 이 대도시 경제권은 공공서비스 공급(전달)체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간계획, 공공건설, 교통, 교통흐름 제어, 상하수도, 물 관리, 쓰레기처리, 소방 등의 분야를 효율적으로 총괄 관리해 오고 있다. 추진주체의 구성은 회원이 되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각각 3명의 대표의원을 선출해서 Grand Lyon 지역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지역의회의 의장 겸 집행기관의 장은 당연히 그 지역의 도시 역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리용시의 시장이 총괄책임을 지고 있다.(안영훈, 2008)

3. 영국의 RDA 중심의 광역경제권

영국의 지역경제권 구분은 1994년 중앙정부의 11개 부처의 업무를 대표하는 통합지방행정청(Government Offices, GOs)이 설치되면서 잉글랜드 지방의 9개 지역(Region)과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전체 12개 지역으로 구분한바 있다. 또한 영국은 1998년 RDA법에 근거해서 1999년 설치 운영되었으며, 런던지역개발청(LDA)은 2000년에 만들어졌으며, 중앙정부가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지방행정청(Government Office) 관할 하의 9개 지역(Region) 중 주요 도시에 RDA를 설치하였고, 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RDA는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런던지역은 London Development Agency, 북잉글랜드는 One Northeast 등으로 불린다. 리용의 광역경제권의 권역은 다음 <그림2-4> 과 같다. (안영훈, 2008)



<그림 2-4> 영국의 RDA 중심의 광역경제권

4. 일본의 광역(경제)계획권

일본은 도도부현이 통합된 8개 광역지방계획권역 설정되어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7월 이후 국토형성계획법을 시행하면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공장제한법, 공업재배치법 등을 폐지하였으며, 동시에 이 법으로 전국계획과 광역지방계획의 체계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광역지방계획에 따라서 (2008년 2월 국토심의회에서 승인, 각료회의에서 결정),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다. 지금까지 47개 도도부현의 평균면적이 8,040km², 평균인구 270만 명으로 광역 공간단위로서는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고 이에 수도권, 토호쿠, 호쿠리쿠, 슈부, 킨키, 슈코쿠, 시코쿠, 큐슈 등 8개 지역을 구분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3개의 대도시권 지역(Metropolitan Regions)과 7개의 농어촌 중심지역(Rural Regions)을 구분하기도 한다.

광역지방계획협의회(Wide Area Regional Plan Council)의 구성을 살펴보면 일본은 지역단위의 정부설립이 없으므로 확정된 지역구분의 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의 광역지방계획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 기구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조직이 공동참여하게 된다. 즉, 국가의 지방분국, 관계도부현(지사), 관계정령시(시장)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획의 협의와 실행을 논의하기 위하여 참여하며 민간은 경제단체만 협의회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국토교통성이 광역지방계획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이러한 계획을 강력히 실현하기 위하여 10년 이내에 도주제에 의한 강력한 지역정부 시스템의 아이디어도 제안한 바 있다.(안영훈, 2008)

제 5 절 해외 신성장동력 육성 사례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대만, 영국)의 중점투자분야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2-1>와 같다.(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기획단, 2008)

<표 2-1> 주요국의 신성장동력 육성사례

구 분		중점투자분야	특 징
미 국	(첨단기술 개발프로 그램)	첨단 소재·화학물, 생명공학 전자/컴퓨터/통신, 정보기술, 제조, 기타 (6개 분야)	- 상업적 이용가치에 초점을 두고,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개 발 및 상용화 목표 ('07년 예산: 13억불)
	(National Nano Initiative)	나노, 바이오, 정보, 에너지·환경, 우주기술 등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나노기술	- '06년부터 신기술 상용화 목적의 신 융합기술 사업 추진('07년 예산 : 13 억불)
일 본 (신산업 창조전략)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츠, 건강/복지 기기 및 서비스, 환경/에너지 기기 및 서비스,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7개 분야)	- 국제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고부가 가치형 산업군 육성 ('06년 예산: 2000억엔)
대 만 (양조·쌍성계획)		반도체, 영상디스플레이, 디지털 콘텐츠, 생명공학기술 (4개 분야)	- 기존의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강화하 는 양조계획 : 반도체, 영상디스플레이 - 신규 유망산업 발굴하는 쌍성계획 : 디지털 콘텐츠, 생명공학
영 국 (연구회지원 프로그램)		생명과학, 에너지, 보건의료, 자연환경, 기반분야 (5개 분야)	- 5개 개별 연구회 관할 연구 영역 에서 국가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수행
EU (Lead Market Initiative)		e-Health, 산업용 섬유, 건설, 바이오제품, 자원 재활용, 재생에너지(6개 분야)	- EU집행위를 통한 글로벌 경쟁 가 능 선도시장(lead market) 선정 - 법령 및 규제 개선, 표준화 등으로, 수요창출

제 III 장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현황 및 정책

제 1 절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현황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을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측면을 고려하여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신성장 동력 기획단에서 발굴하였다. 6대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의 내용은 다음 <표3-1>과 같으며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다음 <표3-2> 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기획단, 2008)

신성장동력 기획단의 22개의 발굴내용은 각 경제권별 으로 나뉜 전략 산업이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필요한 산업을 재 발굴하여 산업전략과 전망을 통한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한 신성장동력화 하는 것이다. 22개의 발굴된 신성장동력 산업의 산업전략과 전망을 통해 각각의 경제권별 추진 기구들이 지역의 특색에 맞는 신성장동력화 시켜야 할 것이다.

<표 3-1>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에너지·환경 (6)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수송시스템 (2)	Green Car, 선박·해양 시스템
New IT (5)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융합신산업 (4)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바이오 (1)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지식서비스 (4)	소프트웨어, 디자인, Healthcare 문화 콘텐츠

<표 3-2>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한 발전전략

단기 (5년 이내 성장동력화)	중기 (5~10년 이내 성장동력화)	장기 (10년 이후 성장동력화)
▪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 문화 콘텐츠 ▪ 디자인 ▪ 소프트웨어 ▪ 반도체 ▪ IT융합 ▪ 선박·해양 시스템	▪ 차세대 무선통신 ▪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LED 조명 ▪ 태양전지 ▪ RFID/USN ▪ 원전 플랜트 ▪ 디스플레이 ▪ 헬스케어	▪ CO₂ 회수 및 자원화 ▪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 신소재·나노융합 ▪ 로봇 ▪ 해양 바이오 연료 ▪ 무공해 석탄 에너지 ▪ 그린카
실용화 기술개발 및 투자환경 조성	핵심기술 선정 및 시장창출	원천기술 확보 및 인력양성

1.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의 산업전략과 전망

가. 에너지 환경

1) 무공해 석탄에너지

무공해 석탄에너지 저급탄을 원료로 합성석유를 생산. 합성석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재활용하는 무공해 가스화 기술 상용화가 핵심이다. 2018년 고용 창출 15만명, 국내 석유소비량 8%* 대체를 한다는 비전 및 목표를 가지는 무공해 석탄에너지의 신성장동력은 유가등락에 따라 합성석유 수요가 연동되어 시장규모의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큰 잠재 시장인 수송유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시장전망이 매우 밝다. 또한 무공해 가스화는 선진국에서도 200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새로운 분야로 기술 격차가 크지 않아 기술적·사업적 성공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약 22조원 투자 필요로 하며 유가 일정수준 이하 하락 시 차액 정부 보전 방안 마련하는 제도개선, 무공해 가스화 기술개발, 합성가스 활용 기술개발, 해외 저급 석탄광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2) 해양바이오 연료

해양바이오 연료는 해조류를 활용하여 석유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를 생산. 대량 양식 기술 및 바이오 연료 양산공정 확립이 관건이다. 2018년 고용 창출 5만명, 국내 휘발유 소비 20%* 대체한다는 비전 및 목표를 가지는 해양바이오 연료의 신성장동력은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은 연평균 7.5% 성장하고 있으며, 07년 513억 리터에서 20년에는 1,500억 리터까지 성장 예상가능하다.

이것은 국내 연구기관이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생산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산공정 확립시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분야 시장 선점 가능하다는 매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약 1.6조원 투자가 필요하며 바이오 연료 사용을 위한 교통세법, 석유사업법 개정등의 제도 개선과 바이오 연료 의무사용정책, 감세정책 마련시행이 시급하다. 또한 민간투자유발을 위한 대형 해양 양식장 개발, 바이오 연료 생산 시스템, 바이오 연료 양산 공장 건설이 필요하다.

3)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가장 유망한 지속가능 에너지확보 수단이며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유망 산업. 설치비용을 낮출 수 있는 2~3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018년 세계시장 20%점유 태양광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및 목표를 가지는 태양전지의 신성장동력은 전 세계 태양전지 시장은 각국의 고유가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급성장 중이며 18년에는 1,870억불 규모로 전망되어진다. 따라서 기존 1세대 태양전지 및 핵심장비는 경쟁력이 취약하나, 2~3세대 기술은 선진국과 격차가 크지 않아 집중 투자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향후 5년간 약 2.4조원 투자 필요하며 3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양산화 기술 확보와 박막 태양전지 및 관련 소재, 장치 국산화 기술개발과 VLS-PV 건설을 통한 시스템 운영 및 적용이 필요하다.

4)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에서 CO₂를 포집하여 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신개념 산업. 폐유전 등 CO₂ 저장장소가 없는 국내에서도 CO₂ 회수/처리가 가능해진다는 강점을 가질 수 있다. 2018년 국내 이산화탄소 발생량 10% 처리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는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 증대로 관련 산업이 거대한 시장으로 등장함에 따라 저비용 재자원화 기술 확보가 관건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약 1,100억원 투자 필요로 하며 배출규제 개정 추진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CO₂포집기술, 포집 CO₂ 재자원화·고부가화 기술 개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기후산업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하다.

5)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물의 전기분해 반응의 역반응 원리를 이용 전기와 열을 생산하며,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생산 시스템이다. 2018년 세계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시장의 40% 점유를 목표로 하며 세계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량('12년)은 1,290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기존 2세대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에서는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이나, 3세대 기술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신성장동력화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약 4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 신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기준가격체계 제도 개선과 대형 연료전지 복합발전플랜트 개발, 차세대 연료전지 상용화, 석탄가스화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행정복합도시, 신도시 개발시 연료전지 발전 채택 신규발전소 건설 및 공공택지개발사업에 연료전지 도입 의무화가 필요하다.

6) 원전 플랜트

원전 플랜트는 미자립 원천기술과 수출용 차세대 신형원전 개발을 앞당겨 세계 6대 원전수출 강국으로 도약가능성이 있다. 2012년까지 원전플랜트 해외수출 달성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약 3,6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고유가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CO₂ 감축 필요성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세계 수준의 운영기술과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최신 시공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경제성 확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미자립 핵심기술 조기 자립화,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 설계코드, 원전 제어계측장치(MMIS), 차세대 신형원전(APR+) 조기 개발이 필요하고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 원전협력 MoU 체결 추진과 원전플랜트 수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나. 수송 시스템

1) 그린카 (Green Car)

그린카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연비가 높고 CO₂ 배출량이 적은 미래형 자동차.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 품목이다. 13년 그린카 4대 강국, 18년 세계 자동차 4강 도약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 그린카는 10년 이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기 시작하여 '30년경 신규 차량 전량 대체 예상되며, '18년 전 세계 시장 규모는 6,593억불로 전망된다. 향후 5년간 약 1.3조원 투자하여 전반적인 그린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을 보완하고,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PHEV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세계 시장 주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안전성평가 및 인증 관련 법령 개정등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PHEV 개발일정 단축 및 조기양산, 친환경 자동차용 초경량, 고효율 부품개발, 클린디젤 파워트레인 시스템 및 통합제어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HEV 보급촉진을 위한 양산단계 인센티브 연료전지차 실증 및 시범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시장창출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선박·해양시스템

선박·해양시스템은 조선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구조물 비중 강화, Mobile Harbor와 같은 전혀 새로운 개념의 해양구조물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13년 세계 1위 조선 강국, 18년 조선기술 Global Leader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약 7,330억 원 투자 필요하다. 선박·해양시스템은 90년대부터 증가해온 선박 신규 및 교체수요 증가 추세가 최근에는 둔화되고 있어 향후 수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쟁국 대비 유연한 설계능력과 높은 납기준수율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세계시장의 35~40% 점유, 세계 1위 지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 친화형 선박 및 핵심 부품 기술 개발과 IT융합 핵심기술개발 및 선실 인테리어 설계 기술 개발, 심해 및 극지 작업용 해양 복합플랜트 핵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성능 해석 및 평가를 위한 시험 인프라 구축, 기존 주력선종의 고부가가치화 및 해양·레저장비 산업등의 활성화로 소형 조선소의 신성장동력화가 필요하다.

다. 새로운 정보기술 (New Information Technology)

1) 반도체

반도체 산업은 시장규모가 메모리보다 약 4배 큰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고 신개념 차세대 메모리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2018년 세계 반도체 2강, 메모리·시스템반도체의 동반 발전을 목표로 PC, 모바일에 이어 DTV, 자동차, 태양전지용 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며 지속 성장이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시스템반도체 주체별 역량은 경쟁국 대비 60~80% 수준이다.

시스템·반도체 산업간 상생협력과 핵심인력 확보가 우선 과제가 필요하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산업(IT, 자동차 등) 및 반도체 제조능력의 강점을 살려야한다. 이에 향후 5년간 약 13.5조원 투자가 필요하며 프로세서, 아날로그, RF설계 및 공정기술 수준화, 자동차반도체의 Infotainment, Body 및 샤시용 반도체 기술, 디지털 헬스 반도체의 소자 개발, 공정 확립 및 플랫폼 구축, 에너지 반도체의 솔라장비/셀, IGBT 소자, 대기절감반도체 기술등의 개발 수준화와 제조에 집중하며, 설계·마케팅능력 배양등 합작법인 설립 등 업계 간의 융합이 필요하다.

2)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휘어지는 Flexible Display, 자체 발광이 가능한 AM-OLED, 자동차-창문 등 응용 분야가 다양한 투명 디스플레이 등 미래 전략품목의 육성이 필요하다. 2018년 세계 최강국, 패널·소재/부품·장비산업 동반 일류화 목표를 가지고 향후 5년간 약 7조원을 투자하여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평판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은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살려 핵심 원천기술과 장비·소재 등 후방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탕정, 파주 등 산업집적단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장건설 규제 완화)등 제도개선 마련과 (대형 AMOLED) 소재·장비, 화소형성, Package, Backplane, 투명소자, OLED 응용기술 (Flexible) 기판소재, 유무기반도체 소자, 공정 및 장비기술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하고 글로벌 해외마케팅 지원-1조원 규모의 중핵기업 육성을 해야한다.

3) 차세대 무선통신

차세대 무선통신은 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4세대 이동통신 등)이다. 2018년 세계 최고의 Mobile Business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향후 5년간 약 3조원 투자 필요하다. 차세대 무선통신 산업은 '10년 2,698억불, '13년 4,094억불, '18년에는 6,410억불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가운데 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2위(21%)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동통신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경쟁력이 취약한 단점이 있고, 단말기 핵심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차세대 무선통신 핵심부품 기술 등 원천 기술 확보가 시급하며, 이동통신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본격화하고 국제표준화 적극 대응 및 표준 IPR 확보,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촉진(방통위 협의) 등 기반기반을 조성한다.

4) LED 조명

LED 조명의 중요성은 반도체 및 IT 기술을 접목하여 고효율·친환경의 고부가가치 조명산업 창출. 국내 조명의 30%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대체시 원전 2기의 발전량 절약한다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TOP3 LED 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향후 5년간 약 3.6조원 투자가 필요하다. LED시장은 지속적 성능향상과 응용분야 확대, '07년 140억불에서 '15년 약 1천억 불 규모로 성장 전망(연평균 30% 성장)되므로 높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최근 대기업 및 중소형 벤처기업들의 LED사업 진출이 급속히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LED제품의 원활한 생산 및 보급을 위해 각종 법령상 요건·기술기준 정비(LED 제품에 대한 고효율 인증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에피/칩/패키징,소재/모듈, 어플리케이션의 연구개발과 더불어 공공 기관의 고효율 LED 조명 사용 확대, 시범 사업 진행, 확대가 필요하다.

5) 차세대 인식 기술/ 센서 네트워크 (RFID/USN)

RFID/USN은 전자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무선주파수를 통해 자동 인식하는 RFID, 센서를 통해 주변정보를 수집하는 USN은 지식기반 산업의 대표 인프라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RFID/USN기반 지능형 서비스 세계 3강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향후 5년간 약 1.2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세계시장은 기술 및 서비스 향상과 함께 다양한 응용/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면서 '18년 약 1,275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된다. 따라서 주요 부품은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의 본격적인 도입·확산을 위해서는 적용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이 시급하다. 또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국제표준 선점 및 특허 대응 역량 제고하고 시범·확산사업 추진 및 RFID 도입의 무화 추진해야 한다. 또한 민간의 RFID/USN 초기적용 비용에 대한 부담경감 및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인천 송도 신도시를 RFID/USN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라. 융합신산업

1) 로봇

로봇 분야는 기기·부품 등 제조업과 응용 SW, 콘텐츠 등 서비스 특성을 모두 갖는 Multi Value Chain형 산업으로,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 미래 유망산업이다. 2018년 지능형 로봇 산업 3대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향후 5년간 약 1.9조원 투자가 필요하다. 10년 이후부터 서비스 로봇시장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20년경에는 4,200억불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선도 대기업의 부족으로 민간주도의 산업 견인 역량은 취약하나 성장 잠재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보건·의료 기술진흥법 등 로봇활용을 위해 시급한 법·제도 개선 우선과제 발굴 및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핵심원천기술개발, 8대 선도 유망품목 제품화 기술개발, 수요 확산을 위한 공통기반 부품·기술개발 등의 연구 개발과 차세대 로봇 보급 확산 및 대규모 실증·체험 공간조성하고 융·복합형 로봇 전문 인력의 양성해야 할 것이다.

2) 신소재·나노융합

신소재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요소이며, 나노융합은 나노기술을 정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타 산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 산업이다. 2018년 세계 4대 소재강국 실현 및 나노기술 확보라는 목표아래 향후 5년간 약 12.6조원 투자 필요하다. 현 신소재 시장의 획기적 확대가 예상되며 나노기반 융합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본격적인 시장 선점 가속되는 가운데 소재부문은 세계 5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숙기로 전환중인 단계이며, 신소재 분야 원천기술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첨단소재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개발된 소재의 사업화를 위한 생산, 가공 등 요소기술 개발, 나노기반 기술개발 및 나노융합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개발된 신소재 상용화를 위한 설비 신규 투자 확대와 Hub & Spoke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3) IT융합 시스템

IT융합 시스템은 기존 전통산업과 IT산업간 융합을 통하여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New IT'의 대표적 분야다. 2018년 IT융합기술 1등 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로 향후 5년간 약 1.3조원 투자 필요하다. 현재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주력산업에서 IT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IT 중요성 증가되는 가운데 국내 IT융합기술은 전반적으로 발전 초기단계로 선진국의 최고기술 수준 대비 50~8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차량안전관련 주파수 기술기준 정비, 에너지 절감/친환경 Green 건설-IT융합 법제도 보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추진 등의 제도개선과 융합 기술개발, 전통산업+IT혁신센터' 도입 및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4)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방송통신 융합미디어는 방송통신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 등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인터넷TV, 휴대방송 등 서비스 융합, 통신·방송 인프라 통합, 단말의 융복합화 등 융합 환경 변화를 선도한다. 2018년 방송통신융합 미디어 및 인프라 분야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서비스-네트워크-단말기 산업이 선순환적으로 동반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디지털기회지수 3년 연속 1위, 브로드밴드 보급률 1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현재 추세로 융합촉진을 위한 서비스 규제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차세대 방송통신 네트워크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본격 개시 및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통신장비 성능비교시험 및 방송통신 국제공인 시험인증 산업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마. 바이오

1)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는 건강, 식량, 환경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바이오신약, 제품 및 IT융합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이다. 2018년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로 한다. 바이오산업은 건강·식량·환경 등 인류난제 해결과 직결,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산업이자 대표적 지식산업으로서 세계 시장은 '08년 3,650억불 규모에서 '13년 7,646억불, '18년 12,353억불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BT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94~'06, 4.4조원)를 통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약 출시 및 의료기기에 대한 원천기술·특허 보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임상·전임상 및 인허가 단계 행정절차 개선 및 규제 완화, 코스닥 상장 및 상장유지 요건 완화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cGMP공정, 위해성 평가 및 기술융복합 인력양성 등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개념 치료제 개발, 차세대 임플란트 개발, 신개념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개발, 융합의료기기 개발(u-health기기, 디지털병원, 의료영상토털 솔루션)등의 지속적 연구개발을 요구한다.

바. 지식 서비스

1)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이다. 2018년 SW산업 세계 5강 도약목표로 향후 5년간 약 1.3조원 투자를 필요로 한다. 세계 SW시장은 '08년 8,841억불에서 '13년까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보이며 12,630억불 규모로 성장 예상되는 가운데 SW솔루션, 임베디드SW기술 분야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약 2.2년('07년 기준)이며, 전자정부, 금융, 인터넷, 통신서비스 등의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SW융합 촉진 공통기술/SW산업 기반 미래핵심SW 기술개발과 전략산업 SW 융합 원천기술 개발등이 필요하며 SW와 제조업 결합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 창출과 소SW 기업의 시장기회 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2) 디자인(Design)

디자인은 기존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의 차별화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세계 4대 디자인 강국 진입의 목표와 함께 향후 5년간 약 4,600억원 투자 필요로 한다. 국내 디자인시장은 최근 5년간 92% 성장('01년 4.07조원 → '06년 7.8조원), 향후 기업과 공공부문의 디자인 투자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 성장 전망되므로 디자인 경쟁력은 세계 14위 수준이며, IT·가전 분야 중심으로 세계 유명 디자인상 수상 실적이 급증하는 등 괄목할 성장을 이룰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 개발위탁 비용 세액공제, 디지털 디자인 자격제도등을 마련하고 디자인 원천기술 및 핵심 콘텐츠 개발, 디지털 디자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과 디자인 마인드 확산 및 디자인 수출 지원, 민간중심 디자인전략연구소 설립 및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 등이 필요하다.

3) 헬스케어(Health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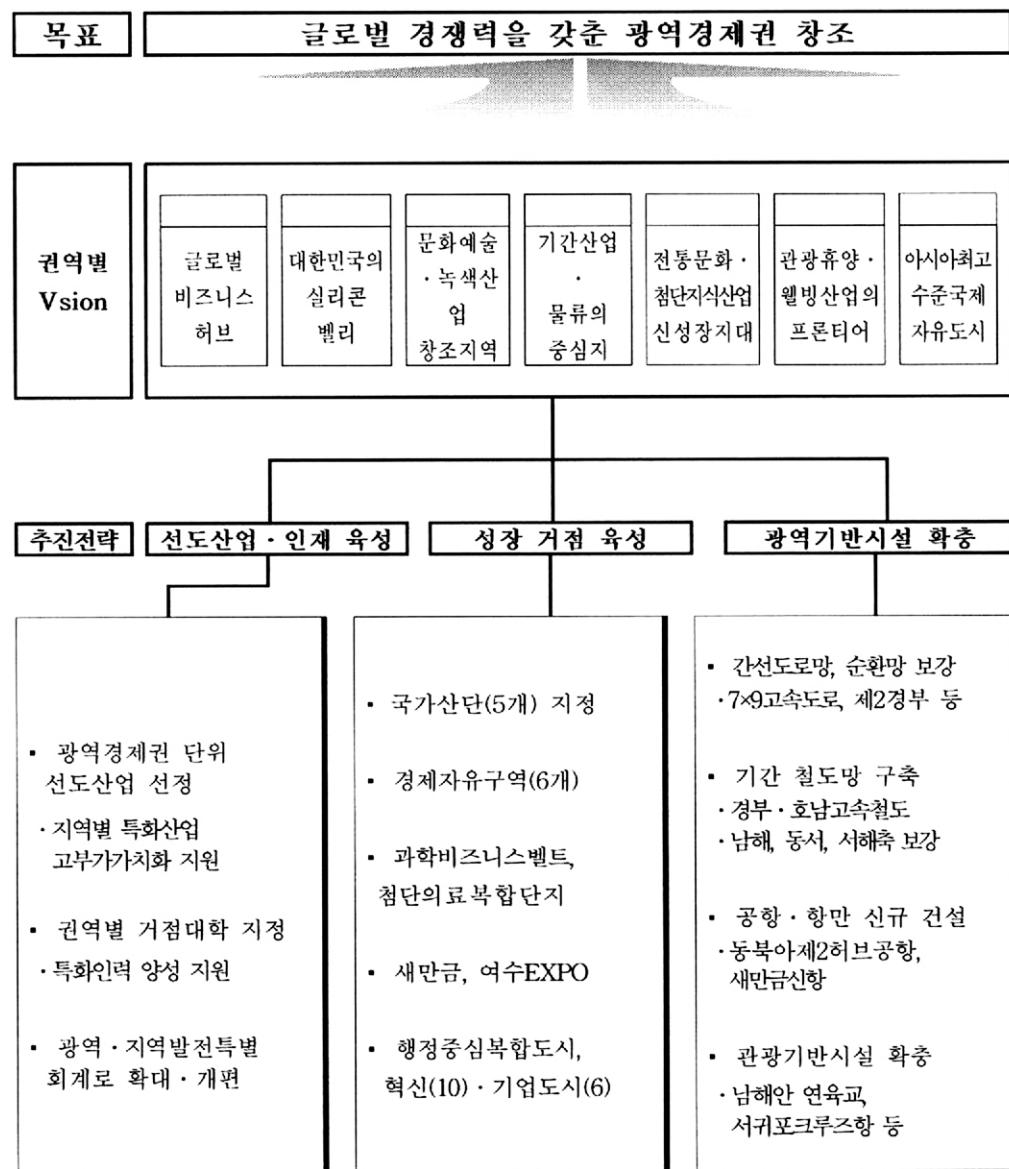
건강 유지, 질병의 예방, 경감, 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이다. 향후 5년간 약 1.8조원 투자 필요하며 2018년 헬스케어서비스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를 지닌다. 최근 5년간(03년-08년) 연평균 11%씩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08년 약 5조 달러 → '2018년 10조 달러 예상)으로 소득수준 향상, 해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환경 변화로 인해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의료서비스 전체의 수준은 미국 대비 76% 수준이나 치과(91%), 안과, 신경외과, 재활의학(89%) 등은 우수(2007, KIET)하다. 따라서 신성장동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보험수가 적용 / 영리형 병원 설립 허용하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 서비스를 위한 IT기술 개발과 특정 의료 서비스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환자 국내 유치 / 국내의료기관 해외 진출 / u-헬스 시범서비스 확대 등의 시장창출에도 힘써야겠다.

4) 문화·콘텐츠

콘텐츠산업은 고용 창출, 연관산업 및 국가브랜드 제고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핵심 산업이다.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콘텐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산업은 아직은 세계시장에서 위상이 낮으나, 세계시장 보다 성장률이 높고 수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류열풍을 만들어낸 문화적 창의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하여 국내 콘텐츠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 할 경우 IT산업을 넘어서는 성장엔진으로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 2 절 중앙정부의 광역경제권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정책

현 중앙 정부의 광역경제권 신성장 동력 산업전략 정책(안)은 다음 <그림3-1>과같이 나타난다.



<그림 3-1> 광역경제권의 정책과정

1. 성장거점 육성

중앙정부의 광역경제권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정책(안)을 살펴보면 성장거점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국가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의 용지공급,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전략산업의 클러스터화 유도하고 이를 위해 5개 신규 국가산단(대구, 포항, 서천, 구미, 광주·전남)을 개발 하고 이중 일본부품소재 전용 공단은 신규산단중 적절한 입지에 조성한다. 또한 진입·간선도로, 용수시설, 공동구 등 기반시설 적기 확충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개발, 첨단산업화 연계를 위한 집적단지로 개발, 이를 위한 첨단 기초과학 연구의 거점을 연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약·의료기기 연구개발센터 건립 등 의료복합단지 개발한다. 이외에 새만금, 여수EXPO 서남해안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재정부, 2008) 이를 위해 새만금은 산업·관광 용지 조기 개발('30→'20)을 통해 환황해권 중심으로 육성하고 여수 EXPO 박람회장, 주변 기반시설을 적기 완공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의 성장거점 역할 강화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광역교통시설, 정주·자족기능 확충하고, 혁신·기업도시는 주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한다.

2. 광역기반시설 확충

중앙정부의 광역경제권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정책 중 광역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첫째, 도로망을 성장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및 순환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광역권내 중심-교외간 연계로 경제·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광역권간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기간도로망을 확충하고¹⁰⁾, 낙후권역의 도시화·산업화를 위해 7개 간선도로망을 보완할 방침이다.¹¹⁾ 둘째, 철도망을 거점도시간 신속한 연결을 위해 철도망 확충하고 이를 위한 경부·호남고속철을 통해 전 국토 반일생활권화 실현¹²⁾하고 복선화·전철화를 통해 광역권간 수송 효율을 제고한다.¹³⁾ 셋째 공항·항만을 광역권과 세계 주요도시를 연계한다. 이를 위한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 (후보지별 타당성조사 중, '08.3~' 09.9월)하고, 새만금 배후지역 물류거점화를 위한 새만금 신항, 군산공항 확장 추진한다. 또한 제주지역 항공운송능력 확충(마스터플랜용역중, '08.6~' 09.9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해양·내륙 관광을 새로운 관광수요에 부합한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이를위한 남해안 연육교(압해-암태, 화양-적금, 마산-거제), 서귀포 크루즈항,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10) · 수도권제2외곽·부산·광주·대구 외곽순환도로, 대덕-세종-오송간 신교통수단

· 제2경부(서울-행정복합도시), 제2서해안(평택-홍성), 제2영동(광주-원주)

11) · 동서2축(춘천-양양), 동서4축(음성-제천), 동서5축(영주-울진),

· 동서6축(상주-영덕), 동서8축(함양-울산), 동서9축(목포-광양)

· 남북7축(주문진-속초, 동해-삼척, 울산-포항-영덕)

12) · 경부2단계는 '10년에 완공하고 호남고속철은 '09년 착공하여 적기 완공

13) · 남해축 : 영·호남 연결 경전선 복선전철화(부산-마산-진주-광양)

· 동서축 : 수도권-강원권을 연결하는 원주-강릉 철도

· 서해축 : 서해안 산업지역과 경인공업지역을 연결하는 서해선

3. 주요정책과제

광역경제권 기반의 지역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쟁력강화와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연계구조 형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지역산업육성단위를 시·도 중심에서 광역경제권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선배, 2008) 우리나라 산업집적의 공간분포는 수도권·동남권·서남권 일부에 집중되어 있는 다핵형 구조인데 반해, 혁신환경은 수도권 중심의 단핵형 구조를 보이고 있어 산업집적과 혁신환경의 공간적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집적 패턴은 광역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집적효과가 광역단위의 행정구역을 가로질러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공간구조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16개 시·도 단위로 이루어지는 지역산업육성단위를 광역경제권 단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 클러스터-중소규모 클러스터를 구분하여 경쟁요소 도입과 집적경제 효과의 공간적 전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 단위로 글로벌-지역경쟁 거점 클러스터의 연계체제 형성이 요구된다. 시·도 차원에서는 지역산업 발전의 선도와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파급효과 극대화를 고려하여 지역 전략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인 공간적 배치를 구상하고, 중앙정부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권역 단위의 지역산업 육성은 특화 센터설립·연구개발·기업지원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대상 지역이 확대되어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혁신시설이나 혁신활동의 임계규모(critical mass) 확보 및 성과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세분에 따른 전략산업 및 사업의 중복 가능성을 줄이고, 권역내 자체적 특화 및 경쟁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춘 공간경제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중앙주도의 계층형에서 광역경제권단위의 분산-협력형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 것이다.(김선배, 200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자발성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중앙

부처는 중앙부처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자체내 각종 혁신지원기관들 간의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각종 지역발전 관련 조직들의 위계와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내에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해야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역 간 과당경쟁을 조정하고, 시너지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을 위해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할 경우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정책 역량, 즉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를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네트워크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네트워크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는 ① 지역의 기획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네트워크 플랫폼은 기술 및 비즈니스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중개, 기업지원 실행 프로그램 수립, 클러스터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 비즈니스서비스·금융·인력 등 제반 기능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② 협력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리더십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경제의 자율성 및 산업발전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임계규모 확보가 어려우므로, 광역경제권 단위에 적합한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산업기획단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통합하여 RDA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③ 향후 지역산업진흥사업이H/W 중심에서 S/W 중심으로 전환해야하고, S/W 사업은 R&D 중심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은 서비스의 다양화·전문화·유료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중앙차원에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지역은 이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셋째, 국고지원 원칙의 개선과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김선배, 2008) 현재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일반회계와 국가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여 중앙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사업추진 지연과 중앙부처의 보조금 지급시기 및 금액의 자의적 결정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제약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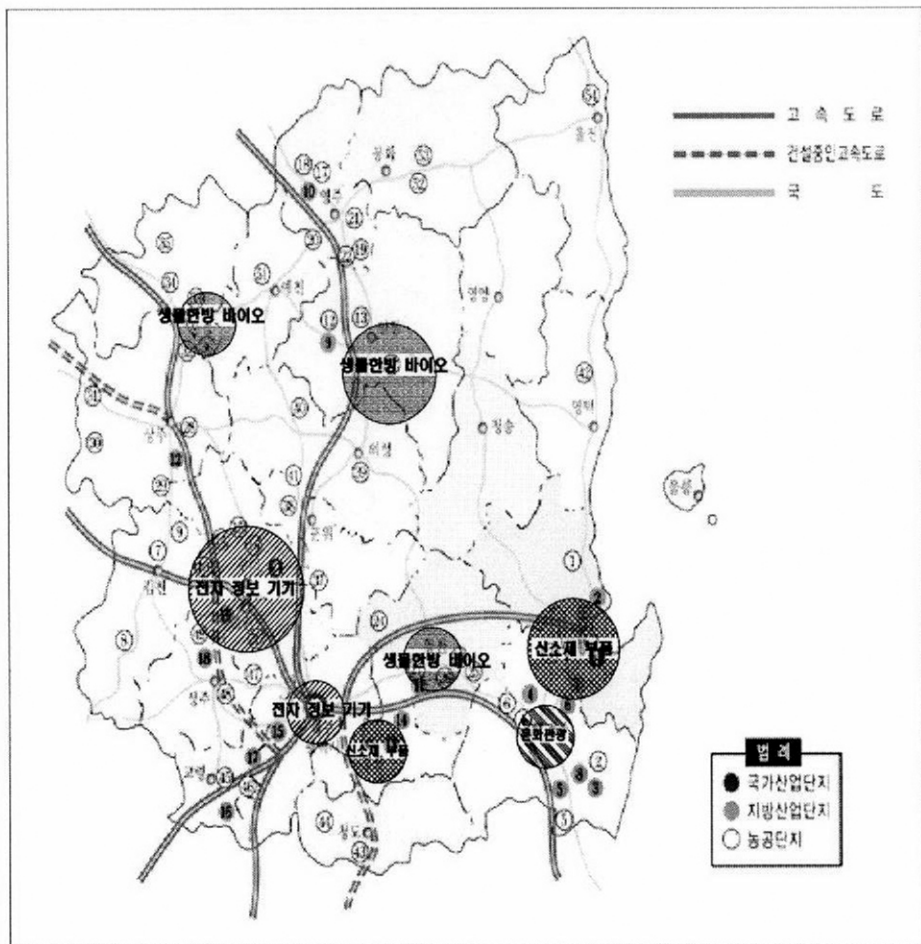
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재정운영 자율성과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포괄적 재정 지원과 투자협약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이 추진할 사업을 선택하고 추진된 사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NIS-RIS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경쟁 및 협력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NIS-RIS 연계사업 (R&D 지원, 연구거점 조성, 연구시설 지원, 거점 클러스터 육성, 산학연 사업, 인력양성 사업등)을 대상으로 각 중앙부처와 광역경제권 간의경쟁을 통한 자원배분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권역 단위로 거점 클러스터-중소규모 클러스터의 연계체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전략산업 투자재원의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기 지역산업진흥 사업에서 실질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을 대폭 확대할 경우를 상정하여, 국비·지방비·민자 부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평가체계는 사업의 기획·선정·집행·평가 등 사업추진 전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산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전 기획평가,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니는 모니터링, 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목표·실행·성과에 대한 사후평가 등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종합적 평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역간의 평가체계를 계층화하고 중앙이 성과중심의 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관리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 발전로드맵의 발전시나리오에서 단계별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 지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성과 목표관리방식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광역경제권중 대경권 산업전략의 현황 및 문제점

대구·경북지역은 <그림3-2>와 같이 포항 과 구미의 국가산업단지, 포항, 경주 등을 포함한 28개의 지방산업단지, 안동 구미 등 54개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계획 중으로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역활력사업에 주력하였다. 또한 <표3-3>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역성장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 경상북도내에 추진되어지고 있다. 이중 전자·정보기기, 임베디드·RFID 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 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성장·발전을 주도하였다. 각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경권의 발전전략 방안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대경권의 전략산업인 5개산업의 부문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표 3-3> 경북 전략산업 및 특화부문

전략산업	특화부문
전자·정보기기	디스플레이, 모바일, 임베디드, RFID
신소재·부품	일반기계부품, 자동차부품, 신소재
생물·한방	한방, 생물건강, 해양바이오, 의료
문화·관광	문화관광, 문화콘텐츠
환경·에너지	환경,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그림 3-2> 대구경북 산업단지 현황과 산업전략 현황

1. 전자 정보 기기산업

전자·정보기기 산업은 전자산업과 IT 관련 제조 및 서비스 분야 중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부문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 제조분야를 포괄하며, IT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대표적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다. (경북전략산업기획단, 2006) 이산업은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2004~2008) 뿐만 아니라 제1차 경상북도 지역혁신 발전5개년계획(2004~2008)에서 정의된 경상북

도 지역혁신 4대전략산업중 하나이다. 현재 경북은 구미를 중심으로 하여 경북 중서부 내륙권 지역의 특성화 전략산업으로 20세기 한국경제 건인의 선두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디스플레이, 디지털 TV, DMB, 임베디드/W, 모바일 관련 전자부품 등 우리나라 전자·정보기기 산업의 메카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대구지역의 전자·정보기기 분야의 중견 산업체 유치 전략에 따라 중소 제조기업의 지역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천기술의 개발과 시장의 다각화, 수출의 확대 등 시장을 위한 통합지원 등의 기능이 열악한 현실이다.

전자·정보기기 산업은 모바일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임베디드·RFID 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경북지역의 모바일 산업은 김천, 왜관 등지에 직·간접적으로 모바일 관련 협력 업체들의 집적화가 진행되어있으며, 모바일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대구에는 북구 동천동 지역 및 성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적화 되어있다.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모바일기업은 총 350여개 이며, 업종별로는 모바일 부품이 151개로 43%, 완성품이 47개로 13%를 차지한다. 경북지역 모바일 관련 산업체 현황은 다음 <표3-4> 과 같다.

<표 3-4> 경북지역 모바일 관련 산업체 현황

(단위 : 개)

구 분		완제품	부품	소재	콘텐츠	솔루션	네트워크/ 서비스	기타	소계
경북 지역	구미	24	73	17	-	4	3	9	130
	김천	-	7	1	1	1	-	2	12
	칠곡	6	32	11	-	-	-	2	51
	기타	4	3	-	5	1	1	-	14
	소계	34	115	29	6	6	4	13	207
대구 지역	북구	6	10	-	4	19	7	9	52
	기타	10	26	-	8	24	15	11	94
	소계	13	36	-	12	43	22	20	146
합 계		47	151	29	18	49	26	33	353

출처 : 대구시(2006), 대구경북 모바일기업 현황.

경북지역 모바일 산업의 문제점으로서 연구개발 기능과 고급인력 정주 기반이 취약하다. 또한 국가간, 지역간, 기업간의 경쟁력이 심화되고 인력 수급문제 또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중심의 생산집적지를 가지고 있고, 정비된 산업기반의 확충으로 CDMA 종주국으로서 세계단말기 산업 구조변화에 따라 시장점유율 확대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경북 지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LG philips LCD, 삼성전자, LG전자, 오리온P에 등과 같은 최고의 기술수준과 생산능력을 갖춘 초대형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다음 <표3-5> 과 같이 65.8%로 집적되어 있다. 그 외에 인근 김천, 칠곡 등지에 <표3-5>과 같이 30.8%로 간접 기업들이 상주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디스플레이 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전문인력의 공급 부족, 기술개발의 미흡, 취약한 부품소재 및 장비기술과 LCD 및 P에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거대자본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과 대만, 일본과 중국 등 업체간의 전략적 제휴와 원천 특허를 앞세운 외국기업의 로열티 요구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하지만 디지털 TV의 급성장과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요구증대, 디스플레이 전방산업이 연계가능성으로 인한 적절한 설비 투자로 시장요구에 적기 대응 및 풍부한 전후방 산업인프라 구축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표 3-5>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지역별 분포와 기업현황

구 분		기업 수	비 율
지 역	구 미	77	65.8%
	김천, 칠곡	36	30.8%
	기 타	4	3.4%
기업분류	대기업	3	2.6%
	중소기업	114	97.4%
주 생산품목	L C D	39	33.3%
	P D P	9	7.7%
	E L D	1	0.9%
	C R T	13	11.1%
	기 타	55	47.0%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	91	77.8%
	100억 미만	12	10.3%
	300억 미만	6	5.1%
	300억 이상	8	6.8%
합 계		117개 업체	100.0%

자료 : 한국경영연구소(2003), 기술수요조사.

세 번째, 임베디드·RFID산업 이다.경상북도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
과 더불어 지역전략산업인 디지털전자정보기기 산업의 5개 특화 분야를
모두 포괄 할 수 있는 기술이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임은 인지하여 유비쿼
터스 환경의 플래그쉽 기술로 RFID/USN 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중이다. 대경권의 임베디드 산업현황은 다음 <표3-6>과 같다.

<표 3-6> 대구·경북지역 임베디드산업 현황

구 분	업체수	매출규모 (백억/년)	종사자수 (명)	비고
모바일 분야	31	9	1,500	본 조사에 참여한 전체 5,544개의 중소기업 중 매출액과 자본규모, 주생산품을 밝힌 71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전체 규모를 추정함
디지털가전분야	53	93	4,000	
전자부품 분야	302	190	15,300	
자동차부품 분야	102	65	7,900	
기계부품 분야	230	317	12,800	
합 계	718	674	41,500	

자료 : (주)경북티피(2003), 경상북도 중소기업 현황조사 보고서.

<표3-6>중 업체수와 종사자를 살펴보면 임베디드 관련 700여 중소기업
체에 4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나 전문 특화된 기술력이 부족하고 중
급기술 이상을 가진 핵심인력의 부족한 현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기술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를 가지고 기술인력의 역외수출이 가속
화 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여개의 대학에서 전문인력을 배출 중에 있고
국가적인 지원제도 기반으로 컨버전스 시대에 맞는 산업분포화 지역 특화
산업 발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 신소재·부품산업

대구·경북지역의 신소재·부품산업으로 기계부품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 신소재 산업으로 나뉜다. 각 산업의 현황 중 대구·경북권의 기계부품산업은 전체 광공업 사업체수의 39.9%를 차지하고 있으나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16%를 차지하는데 그쳐 기업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기계부품산업은 단기간에 경쟁력확보가 어려운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고도의 지식과 장기간의 발전과정을 필요로 한다. 대구·경북권은 기업의 규모가 작고 운영이 폐쇄적이며 영세하다. 또한 완성품 업체에 대한 기술과 판로의 지나친 의존과 업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전자정보기기, 철강, 자동차, 기계류 완성품 제조업체들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지역내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함으로써 발전 및 수출확대에 따른 관련 기계부품, 소재시장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두 번째로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을 보면 다음<표3-7> 과 같다.

<표 3-7> 광업·제조업통계 기준, 대구·경북지역 부품산업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전 국	3,397	135,363	26,285,923	9,874,635
대 구	335(9.9)	11,168(8.3)	1,778,285(6.8)	702,967(7.1)
경 북	275(8.1)	15,496(11.4)	3,085,474(11.7)	1,163,434(11.8)

주 : 5인 이상 기준, ()안은 비중치이고, 전국에 대한 대구, 경북의 비중치임.

자료 : 통계청(2005), 2003 산업총조사조사보고서.

<표 3-7>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는 2003년 말 기준 총 3,397사이고, 종사자수는 129,498, 출하액은 26조 2,859억원으로 나타난다. 이중 경북지역은 59사로 6번째, 대구지역은 49사로 7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침체기의 2001년도 이외에는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소재와 부품, 기반기술력을 확보하고 자동차 부가가치 증대와, 최신정보 기술을 집약한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신소재산업으로써 포항산업과학 연구소 내 부품신소재연구센터, 포항공대, 영남대, 금오공대 등 신소재관련 연구개발역량이 우수하고, 포스코(POSCO) 등 철강재료 관련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다. 하지만 고급연구인력과 역량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위한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가 취약하고 산업화 기반이 열악하다. 또한 획일적 철강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전문 인력과 연구를 통한 산학연 컨소시엄 구축을 하여 구미의 전자기기 제조업체와의 연계를 가속화시키고 지자체 주관의 지역연구개발이 필요하다.

3. 생물·한방바이오산업

대구·경북지역은 전국 최대 규모의 한약재 생산지로 타 지역에 비해 경쟁 우위 요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안동, 영주, 문경 등 북부권의 생산기반 조성과 더불어 영천이 한약 및 집산지로 전통적인 한방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이다. 생물산업은 전체 광공업 사업체수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소규모에 따른 특화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분석되어지며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전체 광공업 6.8명보다 3.2명 많은 10명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표3-8>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용작물의 경우 전국 총생산량의 14.4%, 특히 약용작물인 경우 2004년 기준 3.3천ha으로 전국의 24.2, 생산량은 10.8천M/T 로 전국의 27.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요한 약재인 두충(610ha), 작약(240ha), 천궁(235ha), 당귀(162ha) 등은 경북 북부권이 최고 산지이다. 이외에 6개소의 한약재 가공업체 (2003년기준 전국 18개소), 전국 16%에 달하는 한약재 유통업체, 전문인력 배출(2005년기준 석·박사 688명, 학사 외 직업전문학교 3500여명) 등으로 산업유통에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반 조성이 지지부진한 형편이라 방안 대책이 요구된다.

<표3-8> 경북지역의 작물현황(2004년)

구 분	재배면적 (천ha)		생산량 (천M/T)		농가호수 (호)		단위면적당 생산량 (M/t/ha)	
	전국	경북	전국	경북	전국	경북	전국	경북
특 용 작 물	87.0	12.7 (14.6)	61.0	8.8 (14.4)	37,048	9,700 (26.1)	0.7	0.7
약 용 작 물	13.6	3.3 (24.2)	39.5	10.8 (27.4)	35.6	11.4 (32.0)	2.9	3.3
과실류	174.4	58.3 (33.4)	2,385.3	729.9 (30.6)	143,393	50,941 (35.5)	13.7	12.5
채소류	329.1	53.9 (16.4)	9,121.2	1,159.2 (12.7)	224,549	40,996 (18.3)	27.7	21.4

주 : ()는 전국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2005), 한국통계연감, *농림부, 2004 농업총조사 잠정결과.**

4. 문화관광산업

경북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 안동·영주를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 고령을 중심으로 한 가야문화 등 다양한 문화권이 존재한다. 이 지역은 세계적인 전통문화자원을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최적지로 분석된다. 하지만 경북 관광사업체 추이를 살펴보면 총 36개의 업체가 있으나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2005년기준), 여행업체와 관광숙박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여행업체가 262개사로 7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행업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여행업체의 지역관광산업 진흥과는 거리가 있다. 관광숙박업의 경우 경주에 편중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기타 지역엔 관광산업인프라가 열악하다. 따라서 구조적인프라 구축, 관광객의 유치와 더불어 부가 가치가 높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하여 국제회의 유치와 같은 우리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5. 신재생에너지산업

경북에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테마파크로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적지로 볼 수 있는 곳은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지역 중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지역과 울진의 바다목장 건설과 연계한 해양에너지(파력) 발전단지등이 있다. 또한 독도와 연계하여 풍부한 해양에너지(해양온도차, 가스 하이리트 등)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경북 동해안의 발전구상을 갖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잠재력이 큰 만큼 경북지역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연구에 집중하는 핵심기술 개발센터 유치, 부품산업을 제작 조립할 수 있는 세계적 규모의 Fab센터 설립 그리고 기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운영하여 명실상부한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청정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육성 되어야 한다. (경북전략산업기획단, 2006)

제 IV장 광역경제권의 정책 개선방향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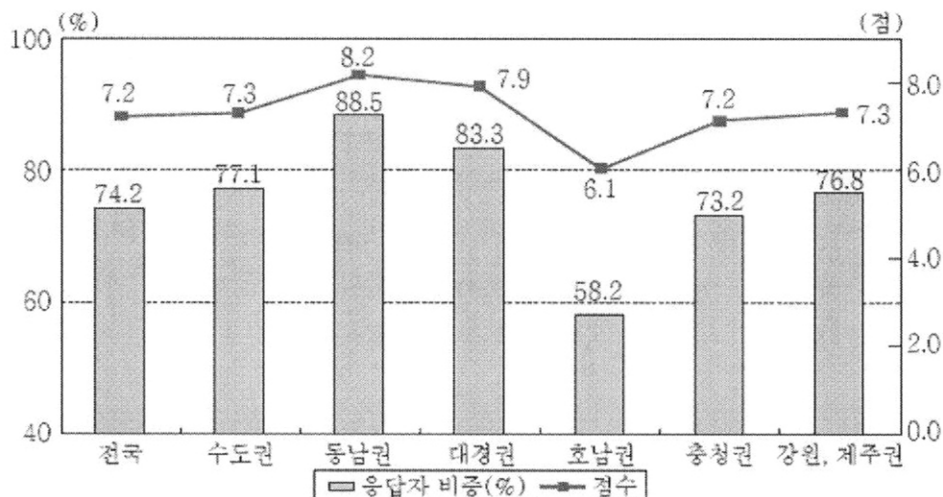
제 1 절 광역경제권의 정책방향에 관한 설문조사

본 연구의 설문 중 광역경제권의 정책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하여 실행하려 했으나 전 국토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해야하는 어려움과 비용으로 인해 금년 9월에 KIET 산업연구원이 주관한 광역경제권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정책의 시사점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인용 하였다. KIET 산업연구원이 주관한 설문조사는 본문 제 IV장의 4.2 와 같이 나타났다. 그리고 신성장동력 산업전략 대한 주민 의식 조사는 필자가 직접 본연구의 중심이 되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1개월간 2회, 경주, 포항, 구미등 3개지역에 2개월간 2회를 실시함으로서 3달에 걸쳐 총4회를 설문조사를 함으로서 대구·경북권의 주민들은 신성장동력에 대한 관심도와 신성장동력의 산업전략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인식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지역중 지역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시내 등 을 중심으로 오후시간대에 직접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과 지인들은통한 주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제작하여 286회수하여 총 배포수의 95.3%를 수집하였으나 이중에서도 응답의 불성실로 인한 통계처리에 부적합 판단을 내린 6 부를 제외한 280부를 본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설문자의 기본사항은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역등을 조사하였고,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에 대한 관심도와 선호도의 경향이 제IV장의 2절과 같이 나타났다.

광역경제권 정책방향에 관한 선행연구의 설문조사는 7대 광역경제권별로 지역의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종사자, 기업지원기관 종사자,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금년 9월 실시되었고, 전국에 걸쳐 427개의 유효샘플을 획득하여 분석한 것을 참고하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광역경제권별 분포는 수도권 11.2%, 동남권 20.4%, 대경권 16.9%, 호남권 23.0%, 충청권 13.1%, 강원·제주권 13.1%, 무응답 2.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의 74.2%가 광역경제권 정책의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KTET 산업경제 정보, 2008)

1. 광역경제권 정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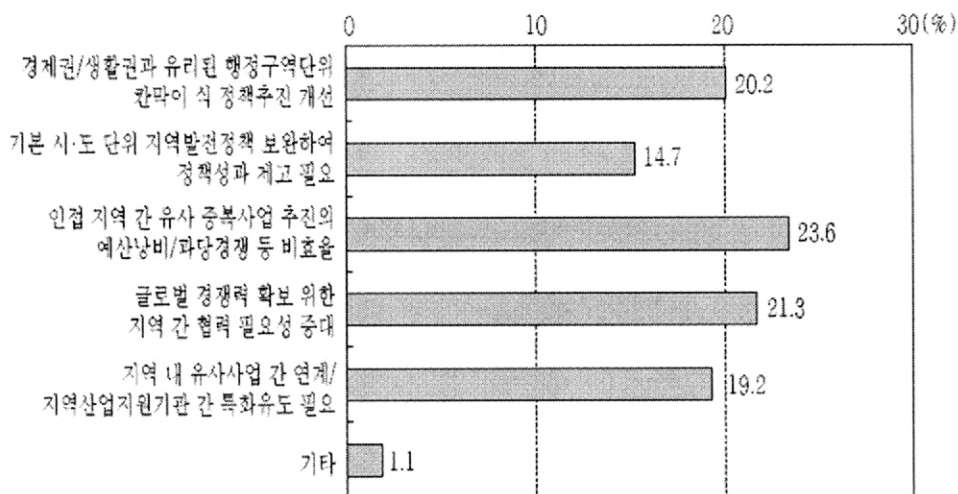
1) KIET 산업연구원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응답자의 74.2%가 광역경제권 정책의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필요성의 정도를 점수화(10점 만점 기준, 5점이 보통 수준을 의미)한 지표에서도 7.2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림 4-1> 광역경제권 정책의 필요성(약간 필요 응답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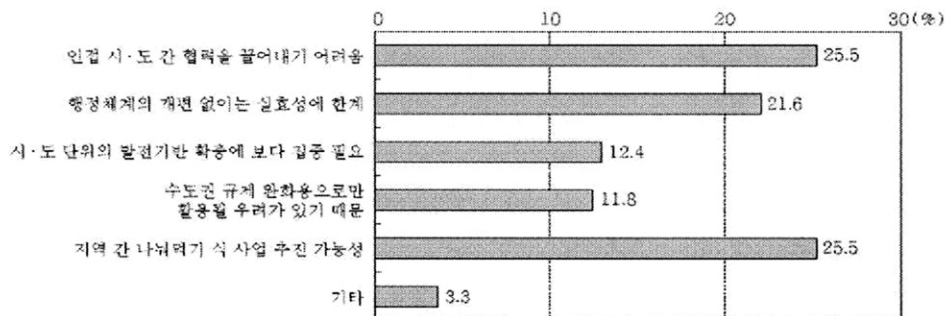
2) 광역경제권별로 보면, 동남권에서 응답자의 88.5%가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경권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반면, 호남권에서는 응답자의 58.2%만 광역경제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경우 다른 광역경제권에 비해서 광역경제권 내 경제·산업적 연관성이 약하고, 산업발전 기반이 취약하여 광역경제권 차원에서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시사한다.

3) 광역경제권 정책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3.6%가 인접 지역 간 유사 중복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와 과당경쟁의 비효율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21.3%), 경제권·생활권과 유리된 행정구역 단위의 칸막이 식 정책추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20.2%) 등도 주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4-2> 광역경제권 정책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는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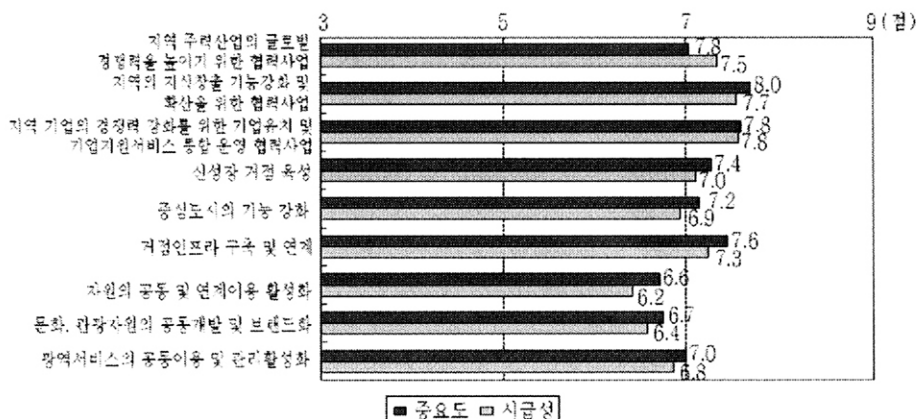
4) 전체 응답자의 13.1%는 광역경제권 정책의 필요성이 작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인접 시·도 간 협력을 끌어내기 어렵고(25.5%), 지역 간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25.5%), 행정구역의 개편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21.6%)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 광역경제권 정책의 필요성이 작다고 생각하는이유

2.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분야별 연계·협력 및 공동 추진의 중요도

1) KIET 산업연구원은 광역경제권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분야 중 지역 간 연계·협력과 공동추진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높은 사업분야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역의 지식창출 기능 강화 및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이 중요도 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사업분야로는 지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사업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협력사업을 들 수 있다.



<그림 4-4>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분야별 연계·협력의 중요도 및 시급성

3. 광역경제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원배분 방향

1) KIET 산업연구원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될 예정인데, 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분야들에 대해 바람직한 자원배분 비중을 조사하였다.

2) 전국 차원에서는 광역경제권별 R & D거점(공공연구소 설립), 거점대학 육성, 인력양성 활성화와 같은 지식창출기능 강화에 17.5%의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높은 자원배분 비중을 설정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산업혁신 인프라 시설의 확충(17.3 %) 과 지역 기업 및 대학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16.7%)을 지목했다. 국제 공항, 항만, 지역 간 연계 인프라, 국가산업단지 등의 광역경제권 거점인프라시설의 조성에는 16.3%, 해외네트워킹과 공동마케팅 등의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의 지원은 14.0%의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기존의 지역개발계정으로 지원되던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창출기반 확충 관련 사업에는 9.0%, 광역경제권의 자원 공동 및 연계 이용 활성화사업에는 8.9%의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3) 주요 사업별 자원배분 비중에 대해서는 광역경제권별로 약간의 차별성을 보여, 지역기업 및 대학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은 대경권에서 자원배분 비중을 가장 높게 설정하고 있고, 대덕 연구단지 등에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충청권은 자원배분 비중을 낮게 설정하고 있다.

<표 4-1> 주요 사업분야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의
적정 배분 비중 (단위 %)

	전국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 제주권
지역기업 및 대학 등에 대한 기술개발역량 강화 지원	16.7	16.7	17.2	19.9	17.3	14.7	13.3
산업혁신 인프라 시설(특화센터, 기술지원 센터 등) 확충	17.3	14.6	17.7	17.4	18.2	15.1	19.1
광역경제권별 R&D거점, 거점대학 육성, 인력양성 활성화 등 지식창출기능 강화	17.5	18.9	17.6	16.5	18.4	16.3	17.0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지원	14.0	13.2	13.0	14.4	13.2	16.2	15.4
광역경제권 거점 인프라 시설 조성	16.3	16.8	18.7	16.2	14.4	15.5	17.3
광역경제권 자원 공동 및 연계 이용 활성화 사업	8.9	9.0	8.8	7.7	8.3	11.4	8.6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창출기반 확충	9.0	10.3	6.9	7.7	9.8	10.5	9.2

4) 특화센터와 같은 산업혁신 인프라시설의 확충 부문에서는 다른 광역권에 비해 산업발전 기반이 취약한 강원·제주권과 호남권에서 자원배분 비중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

5) 지식창출기능의 강화 부문에서는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자원배분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도권의 경우는 세계의 유수지역과 경쟁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많은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호남권의 경우는 부족한 지식창출기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KIET 산업연구원은 해석 하였다.

6) 광역경제권 거점 인프라 시설 조성 부문에서는 동남권에서 자원배분 비중을 가장 높게 설정하고 있다. 동남권의 경우 물자 및 경제활동의 지역 간 연계는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이들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인프라시설은 아직 미흡하고, 국제적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거점공항 등의 확충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KIET 산업연구원은 생각했다.

4. 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요 요인

1) KIET 산업연구원조사에 따르면 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광역경제권별로는 강원·제주권과 대경권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2) 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를 갖는 과제는 지역 간 나눠먹기 식의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사업기획-집행-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과제별 중요도

	전국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 제주권
포괄보조방식을 통한 지역의 자율성 확대	7.26	6.81	6.92	7.45	7.33	7.74	7.62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8.43	7.01	8.39	8.75	8.52	8.72	9.11
강력하고 효율적인 추진조직의 구성	7.85	7.12	7.95	8.19	7.70	8.39	7.95
지역 간 나눠먹기 식의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사업기획·집행·평가관리체계 구축	7.99	8.47	8.30	7.94	7.65	8.10	7.95
지역의 이해관계 조정 및 의견수렴을 위한 거 버넌스 구축	7.60	7.36	7.91	7.59	7.41	8.15	7.29
관련 주체 간 협력제도 운영	7.00	6.81	7.26	6.81	6.79	7.29	7.26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행정구역 개편 추진	6.44	6.11	6.93	6.64	6.24	6.22	6.34

3) 강력하고 효율적인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의 이해관계 조정 및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행정구역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6.44점으로 5점 이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평가는 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다른 과제에 비해 떨어진다.

4) 광역경제권 추진조직의 형태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37.5%가 프로젝트중심의 사업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단이 가장 바람직한 추진조직이라는 응답은 특히 대학교수와 기업지원기관 종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특별지방행정기관 형태의 추진조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27.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은 연구원과 공무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합의기관을 추진기구로 하자는 의견 또는 전문가 주도의 공공기관(Regional Development Agency)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5. 선행설문조사의 정책적 시사점

광역경제권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해 많은 지역 관련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필요성의 정도에서는 광역경제권별로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광역경제권 정책을 획일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발전기반의 상이성을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광역경제권 정책의 사업분야 측면에서는 광역경제권의 지식창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자원배분 측면에서도 R & D거점 육성, 거점대학 육성, 기술개발 지원 확대 등에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위한 사업 등의 중요성도 높게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산업 및 혁신 부문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신성장 거점 및 거점 인프라 구축과 같은 인프라 부문이 뒤를 잇고 있으며, 문화·관광 자원 및 자연자원의 공동 개발과 연계 이용을 위한 사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 이유로서 인접지역 간 유사 중복사업의 추진에 따른 비효율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혁신자원 및 시설, 지원기관 등의 기능적 특화와 연계 체계 강화, 통합운영을 통한 성과 제고 등도 긴요한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자원배분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 육성, 기업 지원, 혁신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부문에 전체 재원의 2/3 정도를 배분하고, 나머지 1 / 3의 재원은 하드웨어적 인프라 조성, 자원의 공동 및 연계이용 부문 등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 다섯째로,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조직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단형태의 조직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행정조직 중심으로 사업을 끌여가기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협력과 연계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제 2 절 신성장동력 산업 입지에 대한 주민 의식조사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광역경제권단위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별 특성화, 지역주도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5+2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이 논의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결론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대구경북 주민들의 신성장동력 및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의식 조사와 앞으로의 우리지역에 가장 필요한 특화 산업에 대한 질의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Microsoft Excel과 SPSS 14.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본사항 3개항목 일반사항 12개항목을 분산 분석하였다. 설문지 세부 항목내용은 다음 <표4-3> 과 같다.

<표 4-3> 설문지 세부항목

영역	내용
I. 기본사항	1. 설문대상자의 거주지역
	2. 설문대상자의 성별
	3. 설문대상자의 연령
II. 일반사항	1. 광역경제권 인식여부
	2. 광역경제권의 인식 경로
	3.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4. 광역경제권의 필요성의 이유
	5. 광역경제권 추진방안
	6.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인식
	7. 지역 산업전략의 인식 유무
	8.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정책과정에 대한 사항
	9. 정책수립과정의 고려사항
	10. 신성장동력 산업전략 육성방안
	11. 신성장동력 산업전략 유치산업 선호도
	12. 신성장동력 산업전략 기대도

1 .응답자의 기본사항

회수된 유효샘플을 분석한 결과 기본사항으로 총 설문응답자의 280명중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가 87명, 193명이고 남녀의 비율이 각각 63.5%, 36.5% 나타났다. 연령분포를 보면 30대가 41.8%로 제일 많았고 29세 이하 32.5%, 40대, 50대 이상이 72명으로 10.3%의 비율을 차지했다. 설문지의 세부항목에 따른 기본사항의 비율은 다음 <표4-4>와 같다.

<표 4-4> 설문지 세부항목 따른 비율1

거주지역		성별		연 령	
대구 광역시	87명 (31%)	남	178명 (63.5%)	29세 이하	91(32.5%)
				30~40 세	117(41.8%)
				40~49세	43 (15.4%)
경상 북도	193명 (69%)	여	102명 (36.5%)	50대 이상	29 (10.3%)
총 계	280명 (100%)	총 계	280명 (100%)	총 계	280명 (100%)

2 . 응답자의 일반사항

광역경제권의 용어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는 항목으로서 대구·경북지역의 거주자 중 광역경제권 용어의 인식여부와 이를 접한 경로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조사 결과 <표4-5> 에서 알 수 있듯이 90%의 응답자가 잘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수가 전체의 8.9%에 불과하여 광역경제권 정책의 관심도와 홍보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설문지 세부항목 따른 비율2

광역경제권의 인식여부		광역경제권의 인식 경로 (알고있다이상)	
정확히 알고있다	2 (0.7%)	대중매체	12 (48.0%)
어느정도 알고 있다	23 (8.2%)	인터넷	11 (44.0%)
잘모르겠다	252 (90.0%)	지인을 통해서	1 (4.0%)
전혀 모르겠다	3 (1.1%)	각종행사, 세미나 및 발표보고회	1 (4.0%)
총 계	280(100%)	총 계	25 (100%)

가. 광역경제권의 필요성과 이유

다음은 광역경제권의 필요성과 이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사항으로서 다음 <표4-6>과 같이 나타났다. 광역경제권을 잘 모른다는 의견과는 상의하게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응답 중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간의 협력필요성이 39.4%, 지역내 유사산업 간 연계/ 지역산업지원기관과의 특화유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9%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광역경제권의 용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대다수의 응답자가 평소 지역과의 연계와 지역특화산업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다. 여기에 부정적 의견으로 전체 응답에 소수지만 비현실적이고 지역과의 경쟁을 심화 시킬 뿐 아니라 실효성에 한계를 느낀다는 응답자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4-6> 설문지 세부항목 따른 비율3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광역경제권 필요성의 이유 (필요이상 응답자만)		광역경제권 필요성의 이유 (필요이하 응답자만)	
매우필요	2 (0.7%)	예산중복 방지	10 (3.8%)	비현실적	8 (38.1%)
필요	257 (91.8%)	지역협력 필요성 증대	102 (39.4%)	지역경쟁대두	7 (33.3%)
약간필요	15 (5.4%)	정책개선	49 (18.9%)	실효성의한계	5 (23.8%)
약간필요없음	6 (2.1%)	지역특화 유도	98 (37.9%)	시도단위위주 의 시설확충우선	1 (4.8%)
전혀필요없음	0 (0%)	기 타	0 (0%)	기 타	0 (0%)
총 계	280(100%)	총 계	259 (100%)	총계	21 (100%)

나.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안과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인식

다음 <표 4-8> 은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에 관한 질의로써 관련주체 간 협력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정확대 21.8%, 강력하고 효율적인 추진조직의 구성이 18.9%, 거버넌스 구축이 1.4%나타났다. 그리고 광역경제권중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에 대한 질의로써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인식과 거주지역 산업전략인식의 유무를 조사·분석하였다. <표 4-7>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광역경제권과 마찬가지로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이 가지는 의미와 용어를 조사응답자중 대다수가 들어본거는 같지만 잘 모른다는 의견이 86.9%로 조사되었으며 거주지역의 산업전략 또한 들어 본것 같지만 잘 모르는 응답자가 전체의 72.9 %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혀 모른다는와 같이 대다수의 응답자의 관심도와 알고 있는 범위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설문지 세부항목 따른 비율4

광역경제권추진방안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인식		지역 산업전략의 인식 유무	
재정확대	61 (21.8%)	확실히 알고있다	1 (0.2%)	확실히 알고있다	1 (0.2%)
거버넌스 구축	4 (1.4%)	어느정도만 알고있다	8 (2.9%)	어느정도만 알고있다	16 (5.7%)
추진조직구성	53 (18.9%)	들어본거 같다	243 (86.9%)	들어본거 같다	204 (72.9%)
협력제도 운영	162 (57.9%)	모른다	28 (10.0%)	모른다	59 (21.2%)
기 타	0 (0%)	기 타	0 (0%)	기 타	0 (0%)
총 계	280(100%)	총 계	280 (100%)	총 계	280 (100%)

다.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정책수립과정의 고려사항과 육성방안

다음 <표 4-8> 은 신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의 정책수립과정의 고려사항과 육성방안에 대한질의로써 정책수립과정시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전체응답자중 61.8%로 대다수의 의견을 보였고,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중점으로 해야한다가 20.7로, 고급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가 12.9%, 정책적연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4.6%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전략 육성방안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기술 및 인프라구축에 27.1%, 국가예산의충분한 지원이 13.6%, 초기시장창출이 3.2%로 나타났다.

<표 4-8> 설문지 세부항목 따른 비율5

정책수립과정시 고려사항		산업전략 육성방안	
구체적전략수립	173(61.8%)	인프라구축	76(27.1%)
의견수렴	58(20.7%)	민간투자활성화	157 (56.1%)
고급인재양성	36(12.9%)	예산지원	38(13.6%)
정책적연계	13(4.6%)	초기시장창출	9(3.2%)
기 타	0 (0%)	기 타	0 (0%)
총 계	280 (100%)	총 계	280 (100%)

라. 거주지역 신성장동력 유치산업 선호도 및 기대도

다음 <표4-9>은 거주지역의 유치산업 선호도 와 신성장동력 산업이 거주 지역경제에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질의로써 전체 응답중 첨단의료(43.9%), 그린에너지산업밸리(35%), 비즈니스벨트구축(20%)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기타로 경주지역은 “ 문화·관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 전체응답의 1.1%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신성장동력 산업 전략이 유치됨으로써 지역경제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에 관한응답은 그저그렇다(44.7%), 잘모르겠다(42.9%)로 대다수가 부정적 응답을 했다.

<표 4-9> 설문지 세부항목 따른 비율6

지역유치산업 선호도		산업전략에대한 기대도	
그린에너지산업밸리	98 (35.0%)	파급효과가크다	8 (2.8%)
첨단의료	123 (43.9%)	그저그렇다	125 (44.7%)
비즈니스벨트	56 (20.0%)	그렇지않다	27 (9.6%)
기 타	문화관광 (경주)3명 (1.1%)	잘모르겠다	120 (42.9%)
총 계	280(100%)	총 계	28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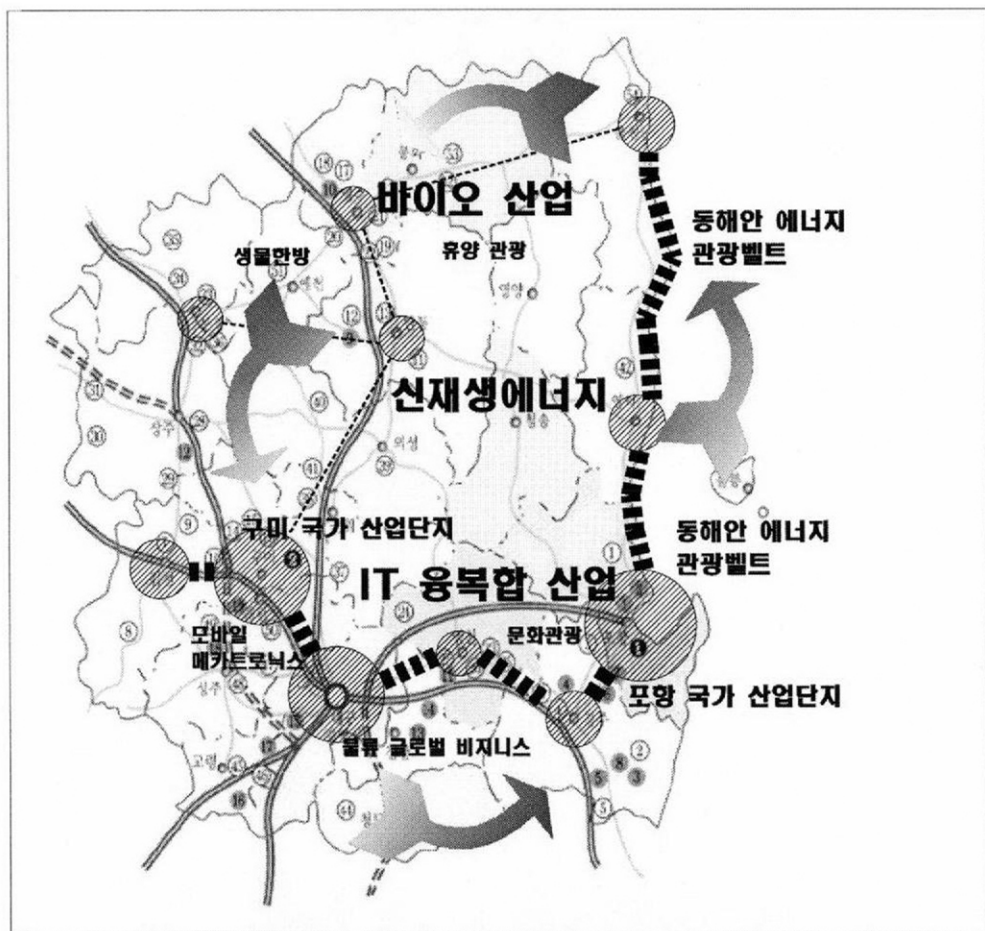
마. 소 결

조사 결과에 따른 비율 <표4-5 부터 표4-9>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은 광역경제권이 가지는 의의와 의미, 광역경제권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해 잘 모르거나 모른다(90%,86.9%)의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말해주듯이 이런 정책적 산업이 일반주민들은 관심도와 이런 발전전략들 자체가 생소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건상 세밀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한 조사 통계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KIET 산업연구원의 지역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이런 용어와 내용 또한 모른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또 하나는 대대적이고 세밀한 통계학적 분석표는 만들지 못했지만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난 것은 막연히 광역경제권과 우리지역의 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첨단의료사업(43.9%)이나, 그린에너지산업(35%), 비즈니스벨트(20%), 문화관광(1.1%)산업이 들어 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실생활 본인이 생활하는데 있어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설문응답자가 전체응답의 2.8%에 불과하였다. 그 산업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기대효과 등 내용과는 무관한 막연한 생각정도에 그친 이번 설문 조사는 본 연구에 크게 반영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필자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 자치단체에서나 국가에서의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행사와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신성장동력 궤기대회, 각종 포럼, 각종 세미나가 진행 중이지만 일반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각종 용어와 전문적 얘기만 논의 되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주민 참여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우리지역의 대대적인 지역 알리기 운동과 학문적 접근이 아닌 행사의 일환으로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실생활에 쓰이는 일반적 얘기로서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방치하기 보단 끌어들이기 정책으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증대와 의견을 수렴되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고민하는 대책 마련과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대경권의 개발방향 정립

1. 대경권 산업전략 개발방향

대경권의 현황과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그림 5-1>과 같은 개발전략 계획으로 되어야 한다.



<그림 5-1> 대경권의 전략 계획

<그림 5-1> 에서 보듯이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를 연계한 크게는 L 축, 세부적으로 □ 자 형태의 광역클러스터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려하여야 하고 전문인력양성 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대경권의 발전을 위한 기초로 대구-경북 연계 교통인프라의 재검토도 필요하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외부지역 연결이 (고속교통체계)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나 인근 접경지역의 순환구조가 불완전하여 산업간 연계의 어려움이 있다. 대구, 경북 물동량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너지산업, 환경산업, 관광산업의 기간망으로 활용할 포항 삼척간의 철도 조기 부설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2. 대경권의 권역별 산업구조 특화전략

그림 <5-1> 과같이 낙후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경북 중·북부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를 도모해야한다. 바이오 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으로 건강·식량·환경 등 인류난제 해결과 직결,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산업이자 대표적 지식산업으로서 세계시장은 '08년 3,650억불 규모에서 '13년 7,646억불, '18년 12,353억불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BT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 ('94~'06, 4.4조원)를 통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약 출시 및 의료 기기에 대한 원천기술·특허 보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임상·전임상 및 인허가 단계 행정절차 개선 및 규제 완화, 코스닥 상장 및 상장유지 요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cGMP공정, 위해성 평가 및 기술융·복합 인력양성 등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개념 치료제 개발, 차세대 임플란트 개발, 신개념 메디 바이오 진단시스템 개발, 융합의료기기 개발 (u-health기기, 디지털병원, 의료 영상토달솔루션)등의 지속적 연구개발을 요구한다. 또한 경북 중북부지역은 양반문화뿐 아니라 불교문화, 민속문화 등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

어 우리의 전통문화를 가장 짙게 맛볼 수 있는 답사코스를 만들어 관광 벨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해야한다. 이들의 대상 지역은 문경 상주 예천 봉화 하회 안동 의성 영양 청송 울진 영덕 등을 10개의 지역으로 관광과 아울러 휴양의 의미를 내포시켜 각박한 도시환경에서 피로를 풀기위해 찾을 수 있는 녹색환경을 부각시켜야 한다.

경북 남부지역은 그동안의 지역전략산업기반을 활용한 IT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더불어 실질적 문화·콘텐츠 산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T융합 시스템은 기존 전통산업과 IT산업간 융합을 통하여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New IT'의 대표적 분야로 현재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주력산업에서 IT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IT 중요성 증가되는 가운데 국내 IT융합기술은 전반적으로 발전 초기단계로 선진국의 최고기술 수준 대비 50~8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차량안전관련 주파수 기술기준 정비, 에너지 절감/친환경 Green 건설-IT융합 법제도 보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추진 등의 제도개선과 융합 기술개발, 전통산업+IT혁신센터' 도입 및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동해안은 에너지관광벨트 개발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한 역동적 경제권의 일환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전략과 구체적 정책방향을 모색해야한다. 동해안 지역은 태양에너지, 수소·연료전지, 풍력 등 많은 신재생에너지는 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유인 제도의 마련, 기존 에너지에 대한 규제 조치 강화 등으로 인해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2%에 불과한 현실이고, 이마저도 폐기물 에너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로 유망한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실질적 산업화 전략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 있다. 대경권의 경우 이미 신재생에너지 기업 587개사와 관련 수요 및 공급시장 등 연관 산업이 발달돼 있고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우수한 산업기반이 구축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과 권역별 특화된 에너지 산업단지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테마파크로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지역 중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지역과 울진의 바다목장 건설과 연계한 해양에너지(파력) 발전단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독도와 연계한 풍부한 해양에너지 (해양온도차, 가스 하이레트 등)를 개발 활용해야한다. 또한 경북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이와 연계한 경북 동해안의 발전구상을 갖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의 더욱 더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잠재력이 큰 만큼 경북지역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연구에 집중하는 핵심기술 개발센터 유치, 부품산업을 제작 조립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Fab센터 설립 그리고 기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운영하여 명실상부한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기반 청정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육성 되어 한다. 구체적 산업화 전략을 구상하여 동해안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획기적인 발전과 구체적 정책방향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제 VI 장 결 론

대경권은 지역전략산업 기반과 그동안 축적된 I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신성장동력으로 발전 시켜야한다. 또한 밸류 체인별 전방위 기업지원 체계와 함께 대학의 풍부한 고급인적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경쟁력 또한 확보시켜야 한다. 그리고 신성장동력은 아니지만 이를 뒷받침할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 영남권 신공항 건설(예정), 정부의 대구달성군 구지면 일원 300만평, 구미, 포항시 동해면, 장기면 일원 300만평을 이용한 국가 산업단지조성 등에 힘입어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의 지역전략산업기반을 활용한 IT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더불어 실질적 문화·콘텐츠 산업과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개발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한 역동적 경제권의 일환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북 중·북부지방의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바이오산업 육성정책과 휴양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각 경제권과의 충분한 협의와 양보를 통해 경쟁이 아닌 협동과 실리추구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에 나타나듯이 지역주민들은 관심도가 극히 저조하고 내용을 모르고 막연하게만 생각할 뿐 아니라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거의 모르는 상태다. 따라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학문적 접근이 아닌 행사의 일환으로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실생활에 쓰이는 일반적 애기로서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주민참여 주도형 구도를 위한 개선 정책 또한 필요하겠다. 본 연구를 위해 객관적 평가와 세밀한 분석을 통한 효율적 개선방안과 산업전략을 분석하려했으나 다변화 하는 정책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충분성과 효율성제고를 하지 못했다. 또한 전문적 분야가 많고 학술적 근거 자료와 학위 논문, 각종자료의 국한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이는 향후 확정된 정책방향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관계기관의 효율적이고 상세한, 포괄적 연구들이 지속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광역경제권의 신성장산업전략에 관한연구는 광역경제권의 체계적 분석과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그 중 광역경제권의 한권역인 대경권의 신성장산업전략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설정 도움에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1. 학술지 논문

- 김선미,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접목방안;충청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8.
「NGO 연구」 제6권 제1호 : 143~163
- 김선배, 광역경제권 구축의 방향과 주요정책과제;지역산업육성을 중심
으로, 2008.
- 김진석,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 발전전략, 2007.
- 신윤창, 김장기, 강원도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산업생태학
적접근을 중심으로,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3호 : 179~200
- 안영훈, 광역경제권의 개념, 유형 및 거버넌스 체제, 2008.
- 이호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모색, 2006.
- 이흥권, 서순탁,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정책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2007.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9집 제3호 : 71~95
- 최봉문, 신동진, 정영기, 성장환, 혁신도시 건설과 지방도시 활성화,
2007.

II. 연구 및 보도자료

- FKI 김태윤, 기업이 전망한 신성장동력;주요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08. 「FKI Issue Paper」 제116호
- KIET 산업연구원(김영수), 광역경제권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정책 시사점, 2008.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19호(2008-45)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생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향 제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 위원회」(2008.07.21)
- 국토해양부(국토정책과),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여 광역경제권 발전선도.(2008.07.21)
- 국토해양부,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방안.(2008.07.21)
- 기획재정부, 지역경쟁력 제고 및 전국토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정·세제·규제개혁 등을 패키지로 지원.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 위원회」(2008.07.21)
- 지식경제부,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방안.(2008.07.21)
- 행정안전부, 지방분권과 지역협력을 통한 신 지역발전정책.
(2008.07.21)
- 교육과학기술부, 선택과 집중에 의한 광역경제권 인력양성지원.
(2008.09.10)
- 교육과학기술부, 광역경제권 인력양성지원 방안.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회의」(2008.09.10)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5+2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과 선도산업·인력·인프라 구축방안 제시.(2008.09.10)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계·특화·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회의」
(2008.09.10)
- 국토해양부(국토정책과), 광역경제권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기반 적극 구축.(2008.09.10)
-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 방안.(2008.09.10)
-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발전비전 제시.(2008.09.10)
- 지식경제부(신성장동력기획단),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 전략 브리핑
참고자료.(2008.09.22)

III. 홈페이지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 www.auric.or.kr
- 경북전략산업기획단 : www.gbria.or.kr
- 경상북도청 : www.gyeongbuk.go.kr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www.balance.go.kr
- 국토해양부 : www.mltm.go.kr
-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 www.dgi.or.kr
- 대구전략산업기획단 : www.dria.or.kr
- 신성장동력기획단 : nge.itfind.or.kr
- 지식경제부 : www.mke.go.kr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주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에 관한연구』란 제목으로 논문을 쓰고자 설문하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을 광역경제권단위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별 특성화, 지역주도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5+2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정책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신성장동력 및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인식조사와 앞으로 우리지역에 가장 필요한 특화산업에 대한 질의로써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있는 응답은 논문의 소중한 자료로 좋은 연구 결과를 얻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여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귀중한 시간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귀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개인정보 및 응답내용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2008 . 10

지도교수 : 김 경 대

연구자 : 이 정 안

경주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 다음 설문에 해당 문항에 “V” 나 내용을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 기본사항 >

1.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 대구광역시
- ② 경상북도(시)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 ② 여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9세 이하
- ② 30세~40세
- ③ 40~49세
- ④ 50대 이상

< 일반사항 >

1. 광역경제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정확히 알고 있다
- ② 대략 알고 있다
- ③ 잘모르겠다
- ④ 전혀 들어본적이 없다

2. 알고 있다면 광역경제권을 접한 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 대중매체 (신문, 라디오, TV)
- ② 인터넷
- ③ 지인들을 통해서
- ④ 각종 지역 세미나나 발표보고회 참석
- ⑤ 기타

3. 광역경제권 정책의 필요성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점만점)

- ① 10점(매우필요)
- ② 7점(필요)
- ③ 5점(약간필요)
- ④ 3점(약간필요없음)
- ⑤ 1점(전혀필요없음)

4. (3번의 ①,②번 응답자) 광역경제권 정책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인접 지역 간 유사 중복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와 과당경쟁의 비효율이 있기 때문
- ②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
- ③ 경제권·생활권과 유리된 행정구역 단위의 칸막이식 정책추진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
- ④ 지역 내 유사사업 간 연계/지역산업지원기관 간 특화유도가 필요하기 때문
- ⑤ 기타

5. (3번의 ④,⑤번 응답자) 광역경제권 정책의 필요성이 작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인접 시·도 간 협력을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
- ② 지역 간 나눠먹기 식 사업 추진 가능성이 크기 때문
- ③ 행정체계의 개편 없이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
- ④ 시·도 단위의 발전기반 확충에 보다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
- ⑤ 기타

6. 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 ② 지역의 이해관계 조정 및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③ 강력하고 효율적인 추진조직의 구성
- ④ 관련 주체 간 협력제도 운영
- ⑤ 기타

7. 신성장 동력이라는 용어를 알고계십니까?

- ① 확실히 알고있다
- ② 어느정도만 알고있다
- ③ 잘 모르지만 들어본거 같다
- ④ 모른다

8. 우리 지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전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① 확실히 알고있다
- ② 어느정도만 알고있다
- ③ 잘 모르지만 들어본거 같다
- ④ 모른다

9. 신성장동력의 정책 수립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② 기술의 수요자인 산업계 의견 수렴
- ③ 고급 인재양성
- ④ 세제지원 및 규제개선 등과의 정책적 연계
- ⑤ 기타

10.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정부의 육성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초기술 및 인프라 구축
- ② 세제지원 및 규제개선 등의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 ③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
- ④ 초기 시장 창출
- ⑤ 기타

11. 우리지역에 어떠한 신성장동력을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린에너지 산업밸리
- ② 첨단의료산업(메디트로닉스) 육성
- ③ 모바일·실용로봇 비즈니스벨트
- ④ 기 타 ()

12. 우리지역에 신성장동력이 유치됨으로 인해 우리지역경제가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모른다

13. 끝으로 우리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 Study on metro-politan city's industry strategy
of new growth power
- focusing on Dae-Gu, Gyeongbuk -

Lee Jung an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Gyuong Dae)

(Abstract)

Present government pursues global competitive strategy based on new growth power and reconsideration of practical regional competition through administrative wasting time and repetition and the cost of decision-making and dealing, transferring and using efficient human, material, and social resources among regions by uniting existing 16 cities and provinces to seven and intergrating the size scope and alteration of the scope of life.

This study shows that present government's development strategy resolves disequality among the regions centering on the sphere economy, not same the word-changing government, planning special development of regions and analyzed new growth-power industry strategy of central government's sphere economic area considering when policy-cognitive new growth powering is occurred. And we present more realistic and efficient plan reflecting citizen Daegu and Gyeongbuk. Thus this study has a meaning of suitable direction about Daegu and Gyeongbuk's new growth industry strategy where is one of the area of sphere economy by propelling new growth industry strategy as pattern of city-space-structure analysing sphere economic area and new growth industry strategy systematically.